

교과서연구

제 53호

2008. 4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박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금용한, 김정호,
윤광원, 최해홍, 홍후조
- 편집협력위원(사·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회(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
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 홈페이지: www.ktrf.re.kr
- 전화: (02) 2651-1950
- 팩스: (02) 2651-1954
- E-mail: editor@ktrf.re.kr

- * 표지 글씨: 신두영
- * 편집·디자인: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 권 두 언

2 _____ 교육의 큰 그림도 필요하다 / 김만곤

● 특별 기획: 교육과 교육과정 정책 동향

- 4 _____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와 교육과정 개정: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 노희방
- 11 _____ 자율과 통제의 양날로 헤쳐 나가는 중국의 교과서 제도 개혁 / 구난희
- 17 _____ 일본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 이충호
- 22 _____ 프랑스의 교육과정, 이렇게 개정된다 / 김차진
- 29 _____ 영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 최봉섭
- 35 _____ 교육 강국 핀란드의 성공 비결 / 강영혜
- 42 _____ 한국의 교과서 제도와 그 개선 방향 / 금용한

● 현장 교육

48 _____ 초등학교 경제 교육의 통합적 접근 / 문중국

● 논 단

- 53 _____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의 쟁점 / 반재천
- 57 _____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 김경희

● 나의 제언

- 64 _____ 사회 교과서-어떻게 쓰면 잘했다고 할까 / 장미현
- 68 _____ 현장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정 / 한춘희

● 교과서 편집자의 변

- 72 _____ 편집자의 역할에 대한 단상 / 김희중
- 76 _____ 교과서는 바둑의 정석이다 / 안성운

● 탐 방

80 _____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24)-김길수 / 영진닷컴 사장

● 자 료

84 _____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 85 _____ • 연구재단 소식
- 86 _____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87 _____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 88 _____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육의 큰 그림도 필요하다



글 | 김만곤

남양주양지초등학교 교장,
본지 편집기획위원장

어느 날, 교과서가 없어지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그거야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육과정 기준을 보고 가르치고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 대답을 하는 교사들이라면 우리는 걱정이 없다. 인공 지능학자 로저 샐크(2002)는 50년쯤 후에는 현재의 우리가 교과서를 사용하고, 수능 시험을 치르고, 기억력을 학력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지난 세기와 그 이전의 수많은 세기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지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는 능력, 어떤 관념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중략) 하지만 그 사실들이 (컴퓨터에 의해) 벽에 쓰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학자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교과서의 내용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교과서는 다만 ‘여러 가지 학습 자료 중에서 중심적인 자료의 하나’,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일 뿐이므로 ‘선택되는 자료, 창의적인 인간, 교육과정 자료, 다양성, 자율의 특성을 가진 열린 교과서관’이 필요하며, ‘전달과 기억을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지식과 기술을 조직 평가 선택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서, 교과 통합적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교과서, 학습자의 경험 세계와 연계를 지니는 교과서, 학습자의 인지 구조 및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물리Ⅱ 과목의 정답 시비 문제가 일어났던 2008 수능 시험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만을 가정한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수능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본고사가 아니라 60만 가까운 학생이 보는 보편적 시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견해까지 내놓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 교육과정 연구의 메카!)의 담당자가, 실제로는 여러 교과서에서 다원자 이상 기체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결국 복수 정답을 인정한 사실이 명백한 사례가 된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과서가 ‘경전(經典)’ 이므로 교과서를 잘 읽고 외울 수밖에 없는—어떤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학력(學力)’ 인지 명확한 개념 설정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외우게 하는—한심한 교육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일본은 다르다. 2007년 8월에 예고된 차기 ‘학습 지도 요령(교육과정)’은, 학력을 높이지 않으면 “21세기의 일본은 위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확실한 학력(確かな學力)’ 정책이 그 기본이다. 또, 지식 기능과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이 ‘살아가는 힘(지식)’의 주요 예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교육 기반이 튼튼한 것은, 새 학습 지도 요령이 혹독한 비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2001년에 시작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개정이라는 점, 우리가 서둘러 교육과정을 바꾸고 전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는 데 비해 저들은 4년 주기로 교과서 정기 검정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숭상(崇尚)’ 하면서도 교육과정 교과서 행정이 기이할 정도로 후진을 면치 못한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교육과정 개정에 앞서 ‘의무교육비 분담법’을 개정하고, 국제 학력 조사 결과를 철저히 반영하며, 교원 양성 등 광범위한 관련 분야부터 정비하는 데 비해, 우리는 그러한 분야가 오히려 교육과정 교과서 행정보다 중시되고 있으며, 걸핏하면 관련 행정 조직을 흔들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내세우면서도 교과서 한 권 값은 “담배 한 갑보다 싸다.”는 것이 자조적(自嘲的) 표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과서 발행사를 입찰로 결정하게 된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 국가에서 관리 지원하는 ‘교과서 박물관’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교과서 연구에도 소홀하다. 1992년에 설립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 조사 연구, 연구물의 출판, 정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의 위탁 연구 수행은 물론 교과서 전시관 운영이 기본 사업이다. 그러나 우선 자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차 연구 사업의 활성화, 교과서 박물관 설치 운영, 교과서 연구 조직과 재단 청사 확보, 교육 지원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5개년 계획(1997. 10. 장관 결재)을 세워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기금 조성 등 초기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단 5명의 직원이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며 사무실을 지키는 빈한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전시관 운영을 위한 자료도 거의 사무국의 열성만으로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대학의 학생 선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초 중등 교육 분권화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욕적인 과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인적 자원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개혁의 지향점, ‘교육의 큰 그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그림’은 당연히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연히 오늘날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정책은 또한 전 세계 주요국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교육과정 교과서 행정을 어떠한 비중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교육 행정과 어떠한 관련 속에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초 중등 교육의 전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되,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틀과 교원 업무는 중앙 정부가 맡게 된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

미국의 교과서 채택 제도와 교육과정 개정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¹⁾

글 | 노희방 (주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미국에서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 교육에 관한 정책은 주 정부의 권한으로 결정을 한다. 즉, 미국 50개 주에서는 주마다 독자적인 헌법과 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특징 교육 제도를 이야기할 때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것이라고 간주하기가 어렵다.

이 글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미국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미국의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의 개발은 민간 발행사가 하며, 지역 교육청에서 관할 지역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선정한다.²⁾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할 때 선정 대상 교과서를 지역 교육청이 결정하는 주와 주 정부에서 정하는 주가 있다. 이때 전자를 개방형 주(open states)라고 하고, 후자를 폐쇄형 주(closed states)라고 한다. 폐쇄형 주에서 학교가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을 교과서 채택(textbook adoption)이라고 한다. 즉, 교과서 채택이란 주 정부가 개발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승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폐쇄형 주에서는 학교에 교과서가 공급되기까지 주 정부의 채택 과정(adoption process)과 지역 교육청의 선정 과정(selection

process)을 거치며, 개방형 주에서는 선정 과정만 거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한 22개 주에서 교과서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사례로 교과서 채택에 관여하는 기관과 채택 대상 교과서, 채택 주기 및 과정 등 전반적인 채택 제도를 고찰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캘리포니아의 교과서 채택 제도

(1) 교과서 채택에 관여하는 기관

캘리포니아에서 교과서 채택에 관여하는 기관으로는 주 교육위원회, 교육과정개발 교재위원회, 교과용 도서 심의회, 주 교육부가 있으며, 채택 과정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 이하 주 교육위원회라고 칭한다.)는 주 헌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주 정부의 교육 기관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 교육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를 관리하고 캘리포니아의 초·중등 교육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주 수준의 교육과정 승인, 교과용 도서 채택, 학력 평가, 지역 교육청 관할 구역 조정, 차터 스쿨 설치, No Child Left Behind법 적용, 예산 배정 등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주 교육위원회는 1년에

6번의 정기 회의와 필요에 의하여 특별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 위원회는 교육 행정가가 대부분이며,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한다. 학생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고, 나머지 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다.

교육과정 개발 교재위원회(Curriculum Development and Supplemental Materials Commission)는 주 교육위원회의 5개 자문 기구 중의 하나이며, 통상적으로 약칭인 ‘교육과정위원회(Curriculum Commission)’로 불린다. 이 위원회는 K-12학년의 교육과정 개정안과 K-8학년의 교과용 도서를 주 교육위원회에 추천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주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13명의 위원과 기타 기관에서 임명한 5명의 위원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 13명 중에서 7명은 영어, 사회, 외국어, 과학, 수학, 순수 예술, 응용 예술, 환경 교과의 교육 전문가(교원, 교육 행정 기관 종사자)이어야 하며, 최소한 7명은 임명 당시 학생을 가르치는 정규 교사이어야 한다. 이들은 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지원한 자들 중에서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³⁾

교육과정위원회는 영어, 수학, 역사/사회 과학, 과학, 시각/공간 예술, 보건, 체육, 외국어 등의 교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위원회는 1년에 4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특별 회의를 개최한다. 각 교과위원회 회의는 교육과정위원회 정기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되며,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용 도서 채택이 이루어지는 해에는 수시로 해당 교과의 위원회가 개최된다.

교과용 도서 심의회는 채택에 출원한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에 일치되게 개발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채택 여부를 추천한다. 심의회는 Content Review Panel(CRP)과 Instructional Materials Advisory

Panel(IMAP)로 구분된다. CRP는 대체로 해당 교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진으로 구성되고, 본인이 전공한 분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IMAP는 주로 현장 교사와 교육 행정가로 구성되며,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서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CRP/IMAP 위원은 주 교육부의 공모에 지원한 자 중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 교육위원회의 임명을 받으며, 그 명단과 소속은 모두 주 교육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CRP/IMAP 위원의 수는 채택에 출원한 도서의 양에 따라 다르며, 주 교육부가 사전에 발행사를 대상으로 출원 예정 조사를 실시하여 숫자를 결정한다.⁴⁾

주 교육부는 대개 1~2명의 CRP 위원과 4~5명의 IMAP 위원을 하나의 팀으로 조직한 후 각 팀마다 검토할 교과서를 배당한다. CRP/IMAP 위원은 교과서 검토를 하기 전에 4~5일 동안 주 교육부가 주관하는 합숙 연수를 받는다. 연수 내용은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의 5개 영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연계한 심사 방법, 검토한 내용을 메모하는 방법, 심사의 주안점, 내용 기준표 작성 방법, 심의회 진행 방법,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수정 보완 사항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다. 연수 기간의 마지막 날에 심의 위원들은 본인이 검토할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의 관계자들로부터 교과서의 특징과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심의 위원들은 연수를 받은 후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출원 자료를 검토한 후 함께 모여 검토한 교과서가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한 후에 도서별로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주 교육부라고 칭한다.)는 주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캘리포니아 공립 초 중등학교의 교육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주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채택에 관

주 교육부는
교육과정 교재과장과 교육과정 팀장,
교과용 도서 팀장을 포함하는 직원 6~7명을
교육과정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로
임명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채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과정 교재과(Curriculum Frameworks and Instructional Resources Division)이다. 교육과정 교재과는 5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며,⁵⁾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하는 교육과정 팀(Curriculum Frameworks Unit), 교과용 도서 채택을 담당하는 교재 팀(Instructional Resources Unit), 청각이나 시각 장애자인을 위한 교재를 관리하는 특수 매체 관리 팀(Clearing House for Special ized Media and Technology Unit)이 있다.

주 교육부는 교육과정 교재과장과 교육과정 팀장, 교과용 도서 팀장을 포함하는 직원 6~7명을 교육과정위원회의 당연직 간사로 임명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용 도서 채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 언급한 세 기관의 위원은 상근직이 아니고 한시적인 임명직이므로 주 교육부 간사들은 교과서와 교육과정 업무가 법규에서 정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는 기본 계획 초안 작성, 기초 연구 또는 기초 연구 위탁,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공모 및 지원서 검토, 교육과정위원회 위원과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연수, 교과용 도서 심의 결과 보고서 검토, 회의 일정 공지, 회의 자료 준비, 회의록 기록 및 공지, 현장 검토 및 검토 의견 분석, 공청회 준비, 주 교육위원회에 안건 상정, 교육과정 공고 및 출판, 교과용 도서 수정 사항 이행 확인, 교과서 교육과정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교과서 대금 배분 등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위원회 간사로 6~7명이 임명되지만,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연수나 심의 기

간 중에는 교육과정 팀과 교과용 도서 팀 전원이 동원되어 진행을 담당한다.

주 교육부의 과 단위에서 연구나 행정에 종사하는 직급은 Analyst, Consultant, 팀장인 Administrator, 과장인 Director 순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공모를 통하여 임용되며, Analyst에서 상위 직급인 Consultant로, Consultant에서 다음 직급인 Administrator로 승진하는 것도 승진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관리직인 과장도 물론 공모를 통하여 임용된다. 이들 직급의 자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자이며,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석 박사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고 경력 또한 중시한다.

(2) 채택 대상 교과서의 종류와 채택 주기

캘리포니아에서는 【표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주요 교과인 영어, 수학, 역사/사회, 과학의 교과서는 매 6년마다 채택을 실시하며, 시각/공간 예술, 외국어, 보건 교과서의 교과서는 매 8년마다 채택을 실시한다. 각 교과서의 채택 주기 내에 두 번의 채택을 실시하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채택을 1차 채택(primary adoption)이라 하고, 다음에 실시하는 채택을 후기 채택(follow-up adoption)이라고 한다. 주 교육부는 K-8학년까지의 교과서만 채택하고, 9~12학년의 교과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에 목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별로 교과서를 심의할 때 대상이 되는 도서는 기본이 되는 학생용 교과서를 비롯하여 교수

학습에 활용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참고 자료, 평가 도구 등을 포함한다. 도서의 형태도 학생용 교과서는 인쇄하여 제본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밖의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과 모든 형태의 전

자 교재 등 다양하다. 채택 심의에 제출하는 참고 자료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사에 따라 교과서와 함께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참고 자료를 채택하여 심의에 제출한다.⁶⁾

【표 1】 K-12학년 교육과정 개정과 K-8학년 교과용 도서 채택 일정

교과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History-Social Science		A				Fc		A				Fc		A
Science			A				Fc		A				Fc	
Mathematics		Fc		A				Fc		A				Fc
Reading/Language Arts/ELD			Fc		A					Fc		A ⁷⁾		
Visual & Performing Arts			A						Fc		A			
Foreign Language						Fc		A						
Health							Fc		A					
Physical Education ⁸⁾		S			F							F		

A : Primary Adoption(1차 채택)

c: Evaluation Criteria(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

자료 출처 : <http://www.cde.ca.gov/ci/cr/cf/index.asp>

F: Framework(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ELD: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3) 채택 절차

캘리포니아 주 헌법과 교육법은 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채택하도록 명시하였다. 또, 교육법에서는 주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교과용 도서 채택 일로부터 30개월 전에 개정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와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표 1】과 같이 주 교육위원회가 장기 교과용 도서 채택 일정을 결정하여 제시하면 주 교육부는 이에 의거하여 교과별로 채택 세부 일정을 세우고 이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는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채택 과정을 일반화한 것이다.

교과용 도서의 채택 심의는 교과용도서심의회→교육과정위원회의 교과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주 교육위원회의 4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각 교과서별로 채택에 추천한다(recommended) 또는 아니한다(not recommended)로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결정 중에서 문제

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모든 교과서별로 추천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결과가 반복되는 교과서가 다수 생기기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과가 반복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 후 모든 교과서별로 다시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⁹⁾ 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는 먼저 주 교육부 담당 과장, 교과 위원회 위원장,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의 경과 보고가 있고, 교과용 도서 심의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심의를 한 후에 교과서별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주 교육위원회의 채택이 확정되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¹⁰⁾ 선정 방법은 지역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두세 개 교과서를 고른 후 시범 적용을 한 후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있고, 일부에서는 시범 적용 없이 선정위원회에서 하나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표 2】 교과용 도서 채택 절차

채택 절차	기관별 추진 내용	일시 ¹⁾
○ 개정 교육과정 승인 ○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 승인	○ 주 교육위원회: 개정 교육과정 승인 ○ 주 교육위원회: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 승인	2005. 3. 2005. 3.
○ 채택 세부 일정 확정	○ 주 교육부: 채택 세부 일정안 작성 ○ 교육과정위원회: 세부 일정안 추천 ○ 주 교육위원회: 세부 일정 승인	2005. 9. 2006. 1.
○ 평가 기준 설명회	○ 주 교육부: 발행사 대상 평가 기준 설명회	2005. 11. 8.
○ 교과용 도서 심의회 구성	○ 주 교육부: CRP/IMAP 위원 공모 ○ 교육과정위원회: CRP/IMAP 위원 추천 ○ 주 교육위원회: CRP/IMAP 위원 임명	2006. 2. 2006. 9., 2006. 12. 2006. 11., 2007. 1.
○ 채택 설명회	○ 주 교육부: 발행사 대상 채택 설명회	2007. 1. 9.
○ 심의 위원 연수	○ 주 교육부: CRP/IMAP 위원 연수	2007. 3. 26~29.
○ 교과용 도서 내용 검토 ○ 교과용 도서 심의회 심의	○ CRP/IMAP 위원: 내용 및 법규 준수 검토 ○ CRP/IMAP: 심의 및 추천	2007. 4~7. 2007. 7~8.
○ 교육과정위원회 주관 공청회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추천	○ 교과분과위원회: 심의 및 추천 ○ 교육과정위원회: 공청회 ○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추천	2007. 9. 27. 2007. 9. 28. 2007. 9. 28.
○ 교과용 도서 전시 ○ 일반인 의견 수렴	○ 주 교육부: 교과용 도서 전시 ○ 주 교육부: 일반인 의견 수렴	2007. 10. 2007. 10.
○ 주교육위원회 주관 공청회 ○ 주교육위원회 심의, 채택	○ 주 교육위원회: 공청회 ○ 주 교육위원회: 채택 심의 및 의결 ○ 주 교육부: 채택 공고	2007. 11. 8. 2007. 11. 8. 2007. 11. 9.
○ 교과용 도서 수정 보완 ○ 인쇄, 주문, 공급	○ 주 교육부: 수정 보완 이행 확인 ○ 발행사: 교과용 도서 인쇄, 공급 ○ 지역 교육청: 교과용 도서 주문	2007. 11~12. 2008. 2. 2008. 4.
○ 채택 보고서 발간	○ 주 교육부: 채택 보고서 발간	2008.

교과용 도서 심의 위원 연수를 포함한 채택 과정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채택 기간 동안 학습 자료 전시장에 모든 출원

도서를 30일 동안 전시하고 공청회를 2회 개최하여 일반인이나 교육 당사자들이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과

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II. 교육과정의 성격과 개정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에서는 초 중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주요 교과와 범교과 학습 내용 등을 제시하고 일부 교과의 시간 배당 등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 즉 총론 개정은 주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첨삭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용 도서 채택과 연계되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이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 검정이 실시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교과용 도서 채택 일정이 먼저 확정되고 일정을 역산하여 현행 교육과정 개정 후에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다.

현행 캘리포니아 교과별 교육과정은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과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curriculum framework)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기준은 각 교과에서 학년별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 개념, 기능을 진술한 것으로 우리나라 교과별 교육과정 중에서 학년별 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미국에서 각 교과의 학년별 내용 기준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83년 미연방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과제의 보고서 ‘국가 위기(A Nation at Risk)’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초 중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후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미국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등의 분야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

을 내리고 대처 방안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관련하여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 성취 수준, 교육 시간 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A Nation at Risk’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당시 대통령 조지 부시는 처음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주지사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진단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보았다. 이 모임의 결과 1994년에 ‘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라는 법이 제정되었고,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1990년대에 영어, 수학, 역사, 지리, 경제,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 등의 교과목에서 국가 수준의 학년별 내용 기준이 개발되었다. 이 내용 기준은 대부분 관련 교과목의 학회에서 개발한 것으로 단위 학교의 교육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각 주의 단위 학교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연방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이어 미국의 각 주에서 개발된 교과별 내용 기준이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는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 체육의 내용 기준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보건과 외국어는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과별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는 내용 기준을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여기에는 교과의 성격, 교수 학습 방법 및 전략, 교사 연수, 평가 및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의 채택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개정이 수반되는데, 내용 기준이 제정된 직후에 이루어진 해당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개정 시에는 전면적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 기준 제정 후 두 번째 실시하였던 수학과 영어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개정 시에는 내용 기준은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사회적, 학문적 변

화만을 반영하여 소폭의 부분 개정만 이루어졌다.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개정은 주 교육부가 작성하여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범위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평가기준위원회(Curriculum Framework and Criteria Committee)의 초안 개발→전문가 검토→교과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일반인 의견 수렴, 수정 보완, 공청회, 추천→주 교육위원회의 공청회, 승인의 절차를 밟아 확정된다.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를 개정할 때에는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도 동시에 개정을 하여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개정 소요되는 기간은 18개월 정도이다. 교육과정 평가기준위원회는 주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15명에서 20명 사이의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의 해당 교과 교원들로 구성되며, 소폭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교육과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개발한다.

III. 맺는말

이 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교과서 채택 제도와 교육과정 개정을 고찰함으로써 미국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제도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하는 22개 주 정부에서 학교가 사용할 교과서의 목록을 결정하는 채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법규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에 각 주별로 학생들이 학년별로 습득해야 하는 내용 기준을 제정하였고, 이 기준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내용 기준을 교과용 도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교과용 도서 채택과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를 거

쳐 주 교육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주 교육부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법규와 일정에 맞게 모든 업무가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교과용 도서 채택이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모든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교과용 도서와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연**

- 1) 이 글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한 서지영, 김정호, 노희방, 유은미, 『미국의 교과용 도서 정책과 질 관리 체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 2) 미국 정부에서는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며, 또 사립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교과서와 교육과정 관련 내용은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3) 주 교육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은 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1년에 2~4명씩 교체된다.
- 4) 2007년도에 실시한 수학 교과용 도서 채택에는 14명의 CRP 위원과 141명의 IMAP 위원이 임명되었다.
- 5) 주 교육부에는 과별로 정원이 정해지지 않고 업무량에 따라 유연하게 인원이 조정된다. 교육과정 교재과는 1990년대 말 주요 교과와 교육과정 내용 기준이 개발되면서 업무량이 증가되어 과 단위로 승격되었고, 인원도 많이 보강되었다.
- 6) 학생용 교과서는 1인당 1권씩 구매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나, 나머지 교재는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 7) 수학과 영어 교과서 채택에는 출원 도서가 많아 예산과 관리 인력이 집중되므로 2006년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수학과 영어 교과서 채택을 연이어 할 수 없도록 의결하여 차기 채택 연도가 2015년으로 조정되었다.
- 8) 체육 교과서는 주에서 교육과정만 개발하고 교과서 채택은 실시하지 않는다.
- 9) 2007년도에 실시한 수학 교과용 도서 채택에서 54책의 교과서 중에서 6책의 교과서의 추천 여부가 교과위원회에서 반복되었다.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대체로 교과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따르고 있다.
- 10) 주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하는 교과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없어 학부모가 교과서 대금을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택이 안 된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11) 2007년에 실시되던 수학 채택 과정에 따른 일시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자율과 통제의 양날로 헤쳐 나가는 중국의 교과서 제도 개혁

글 | 구난희 (덕수중학교 교감)



I. 중국 교육계의 변화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교육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질 높고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율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규범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글은 이러한 중국 교육의 변화 속에 자율과 통제의 두 방향이 각각 어떻게 작동되면서 새로운 교과서 지형을 생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중국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변화를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여, 이 글에서는 그간에 공개된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특성을 추론하는데 한정하기로 한다. 우선 교과서 제도 개혁의 기초적 배경으로 중국의 교육과정 개혁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II. 교육과정 개혁

중국의 교육과정 개혁은 개혁 개방의 확대와 함께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 3월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보통고 중학

교육 계획 조정에 관한 의견(關於現行普通高中教學計劃調整的意見)’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핵심은 교육 내용 감소와 선택 과목 확대에 있었다. 이에 따른 중요한 변화는 지금까지 하나의 교육과정과 하나의 교과서로 운영되던 체제를 이른바 복수의 교육과정과 복수의 교과서 체제로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교학 대강(教學大綱)으로부터 과정 표준으로 이행하면서 더욱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¹⁾ 2001년 국무원의 ‘기초 교육 개혁과 발전에 관한 결정(關於基礎教育改革與發展的決定)’과 교육부의 ‘기초 교육과정 개혁 강요(시행)’가 발표됨에 따라 각 省(區)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교육과정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2001년 11월 교육부는 ‘의무 교육과정 설치 실험 방안’을 제정, 반포하였으며, 이후 각 省(區)은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저장 성(浙江省)의 경우 의무 교육과정은 2002년 가을 학기부터 실험 구에 적용하여 2003년에는 35%, 2004년에는 6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고시하였으며,²⁾ 후베이 성(湖北省)의 경우도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10~35% 수준까지 실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³⁾ 이로 보아 전국 각 省(區)이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점차 실험 적용을 확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⁴⁾ 기초 교육과정 중에서 초급중학교(중학교)까지는 2005년 9월부터 과정 표준을 전국에 전면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급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는 2005

년 9월부터 실험 구에 적용하기 시작하여⁵⁾ 의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의무 교육과정의 확대 현황에 비추어 보면 보통 고급중학교는 2008년 또는 2009년에는 과정 표준이 전면 시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는 교학 대강에 의거한 기존의 교과서와 과정 표준에 의거한 실험 교과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 기간이 끝나면 과정 표준 체제로 전면 이행하고 이전의 교학 대강 교과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이라면 소학교 및 초급중학교의 경우 과정 표준에 의거한 실험 교과서가 2005년 가을 신학기부터 전국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2007년 가을까지도 전면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고급중학교의 실험 교과서 역시 실험 기간을 거쳐 2008년 이후에는 전면 사용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오는 2008년 9월에는 그간의 실험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본주의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특성상, 개방과 자율이라는 흐름으로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않다. 특히, 1986년 4월 5일과 1989년 6월 4일에 일어났던 제1차, 제2차 천안문 사건⁶⁾ 이후 개혁과 개방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변함 없이 이끌어 나갈 것인지 심각히 고민하게 되었음을⁷⁾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제도 개혁과 동시에 이른바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주의 이념의 유지, 강화는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공식적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 ‘애국주의 및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해 왔다. 1990년 5월 애국주의는 각 민족 인민의 정신적 지주이자 역사 범주라고 정의하고, 현 계급에 있어서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을 건설하고 조국 통일 사업을 촉진하는 데 헌신하기 위한 주요한 표현이며, 이는 사회주의와 본질적으로 통일된 것임을 강조했다.⁸⁾ ‘자율과 경쟁’, 그리고

‘애국주의 강화’라는 이질적인 정책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 개혁은 필연적으로 교과서 발행 제도에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Ⅲ.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특징

중국의 교과서는 1985년 1월 발표된 ‘전국 중소학 교재 편찬(編寫)심정위원회 공작 장정’과 함께 심정(審定) 제도로 변화하였다.⁹⁾ 이어 1986년 9월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가 성립되었고, 그 아래 각 과목별 교재심사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는 전국 각 학과의 교학 대강과 교재를 심정하고 과목별 심사위원회 업무를 지도하도록 규정하였다. 교과별 교학 대강의 제정 및 교과서 편찬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국가교육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출판, 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교과서는 반드시 표지에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 심정’이라는 표시를 해야만 한다.

2000년 초부터 교육부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신문출판사가 공동으로 초·중등 교재의 편찬 및 심사 체제를 비롯하여 출판, 발행 등 교재 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한 기초 위에 국무원은 2001년 6월에 ‘교과서 가격 인하, 교재 관리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關於降低中小學教材價格, 深化教材管理體制改革的意見)’을 공고하고, 이와 관련된 11개 문건을 공포하였다.¹⁰⁾ 이렇게 정비된 제도하에서 교과서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 보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¹¹⁾

(1) 서류 심사

교재 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신고하여 비준을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교재의 질 저하와 특징 없는 중복을 막아 자원 낭비를 줄이고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둔 것이다. 따라서 교재를 개발하려는 경우 국무

원 또는 지방성 교육 행정 기관에 반드시 편찬 계획을 신청하고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편찬 단위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사

전에 통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²⁾ 신청해야 할 서류와 각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신청 서류	구성 항목
교재 편찬 항목 표 (中小學教材編寫立項表)	① 교재명, 적용 학년과 범위, 출판 단위, 예상 분량, 소요 기간 ② 출판 단체, 또는 개인 등 신청자의 기본 현황. 특히 대표 저자 및 집필진의 현황 ③ 교재 편찬의 목적과 지도 사상, 교재의 특징, 구조
견본 단원(樣章)	교재의 주요 특징과 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단원
2편의 연구 논문	국내외 해당 과정의 발전 상황과 동종의 교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한 연구물
기타 관련 증빙 자료	주요 집필진의 이력서, 연구 성과, 2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 의견, 소속 교육 기관의 의견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내용 심사와 자질 심사의 두 단계를 거친다. 내용 심사는 말 그대로 교과서 서술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질 심사는 신청자의 자질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심사로 진행된다.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지고, 심사 결과는 6월 말과 12월 말에 발표된다.

(2) 교재의 편찬

신청 심사에 합격하면 편찬이 이루어진다. 교재 편찬은 당연히 교육과정에 의거해야 한다.¹³⁾ 그러나 현재 전환되고 있는 과정 표준은 각 과목이 실현해야 할 과정 목표와 학습해야 할 과정 내용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찬 과정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조직하고 재창작하는 자율성이 보장된다.

대개 교재 편찬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교재 편찬의 지도 사상과 편찬 원칙을 확인하고 교재의 특색, 전체 구조와 체계를 설계한다. 다음으로 전문가와 교사 의견을 구하여 수정 보완하고, 2~3개의 견본 단원을 설계한다. 견본 단원이 개발되면 이를 현장 교사들에게 의뢰하여 수정 보완한 뒤에, 이를 근거로 전체 내용을 편찬한다. 수차에 걸친 토론과 수정 보완, 시험 운영을 거쳐 교재가 완성되면 주편(대표 저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교재 편찬 지침서를 통해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 관리하고 있다.¹⁴⁾ 그동안 중국 내 대부분의 교재를 독점해 왔던 인민교육출판사의 예를 보면 2003년에 『基礎教育教材建設叢書：中小學教材的編寫出版』을 발행하여 보급하였다. 이 문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은 정치 문제, 민족 문제, 국제 관계 문제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반우파 투쟁,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등 일련의 정치 사건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관련 문건에 의거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점, 중국 내 소수 민족은 중화 민족 대가정의 주요 성원이라는 점 등 현재 중국의 국가 유지에 있어 민감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3) 교재의 심사(審定)

초·중등 교과서의 심사 기구는 교육부 기초교육교재심정판공실(基礎教育教材審定工作辦公室, 사무국에 해당)과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이다. 다시 하부에는 각 과목별 교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은 해당 과목별로 교재의 초심과 심정을 담당하며 심정위원회에 심정 보고를 제출한다. 심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각 과목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 심리학 전문가, 중·소·학 교육 연구 인원과 우수 교사로 구성된다. 심정 및

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각 지역의 교육 행정 기관, 교육 연구 기구, 각 대학 및 저명 전문가의 추천에 따라 심사한 후 국무원 교육 행정 기관의 초빙을 받으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으로 초빙된 기간에는 교재 편찬을 담당할 수 없다. 심사 과정은 초심(初審)과 심정(審定)으로 이루어진다.

① 초심(初審)

초심은 교육부 기초교육교재심정공작판공실에 서 담당한다. 판공실은 서류 심사 시 제출된 계획 대로 교과서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심사 시기를 사전에 통지한다. 교재 편찬 단위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완성된 교재 및 송심 보고서를 제출한다. 송심 보고서는 개발진과 심사진 간의 의사소통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송심 보고서에서는 주로 교재 편찬의 지도 사상과 철학을 명확히 전달하고 교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된다. 제출된 교재와 송심 보고는 심사 위원에게 송부되고¹⁵⁾ 심사 위원은 이를 사전에 검토한 뒤 판공실이 주관하는 교재 심사 회의에 모여 해당 교재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초심 통과본의 실험 사용

초심을 통과한 교재는 일정 기간 실험구의 학교에서 시험 사용한다. 대체로 400 학급 또는 2만 명 학생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우선 초심을 통과한 실험 교과서는 ‘실험교학용서(實驗敎學用書目錄)’에 포함되어 각 성에 배포되고 각 성 교육 행정 기관은 그것을 소속 실험구와 학교에 전달하여 채택하도록 안내한다.

이전에도 실험 적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대상 범위가 1~2개 실험반에 불과하였으므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험 적용은 예비 시행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만큼의 확대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교육출판사 본교재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28개 성, 시, 자치구의

3,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33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해당 실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과정 표준 실험 교과서는 2001년부터 실험 적용이 되었는데, 2003년 가을에는 3,500만 명의 학생이 실험 교과서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실험 적용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③ 심정(審定)

편찬 단위는 실험 사용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재를 수정 보완하고, 수정된 교재와 송심 보고서를 다시 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때 제출되는 제2차 송심 보고서는 시험 사용에 따른 의견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 밖에서도 시험 지역의 학생 수, 시험 기간 및 효과, 시험 지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평가 등이 담긴 시험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심정의 결과는 통과, 재심사, 재 송심, 통과 불가의 4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통과’한 교재는 심정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비준을 받은 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심사’는 출판 단위가 심정 의견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 내 교재를 수정한 뒤 재심사하는 것으로 재심사를 통과하면 통과 도서와 같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송심’은 교재가 비록 심정 표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수정하여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 의견에 따라 수정한 뒤 다음 해에 다시 송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과 불가’는 교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송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교재의 채택

이렇게 발행이 다양화되는 것과 함께 채택 제도도 변화하였다. 종전의 국정제하에서 교과서 채택은 국가교육위원회에만 주어졌던 반면, 심정 제도가 성립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심정 교재의 심사에만 책임을 지고 교재의 채택은 지방의 교육 행

정 기관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폭을 열었다.¹⁷⁾

심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국무원 교육 행정 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 ‘전국중소학교학용서목록’에 포함되어 각 성에 제공되고, 각 성의 교육 행정 기관은 이 목록과 해당 성의 상황을 근거하여 각성별로 별도의 교학용서목록을 편제하여 해당 학교 및 출판사에 배포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참고로 교과서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채택 단위는 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몇 개의 현이 조합한 지시급(地市級)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IV. 맺음말


중국의 교과서 제도는 급격한 변화 단계에서 ‘자율과 경쟁’, 그리고 ‘통제와 관리’라는 서로 상반된 기본 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개발과 편찬, 그리고 채택 과정에서의 자율은 보장하되, 심사 과정에서의 통제와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진다. 비록 이러한 운영이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적 체제 유지라는 현실적 고민 속에서 강구된 중국 사회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교과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류 심사의 사례를 들어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류 심사 시 편찬 단위의 세부 사항을 항목별로 일일이 심사할 뿐만 아니라, 견본 단원이나 연구 논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누구나 교재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재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의 교과서 편찬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도 있다. 검정 출원이 확대되면서 검정 심사가 당초의 기능보다 교과서 만들어 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교과서 현실

을 감안해 볼 때 각별히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실험 적용의 점진적 확대와 그 결과의 피드백 과정을 서류 심사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교과서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다. 흔히 ‘교과서가 완벽하게 다듬어지면 새 교과서를 개발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교과서는 수년간의 현장 적용을 거친 연후에 비로소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해당 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된 이후 교과서 기술에 따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실험 적용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민간 발행 속에서도 국가 차원의 관리 체제가 작동될 수 있는 근본 장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심정제의 실질적 운영은 심정 또는 심사위원회가 담당하되, 이의 총체적 관리는 국무원의 소관이다. 심정제 확대라는 가히 혁명적 변화 속에서도 교과서의 위상과 품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교과서 개발이 시작되는 걸목을 국무원이 직접 나서서 엄정한 잣대를 들고 지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 모든 부분을 이양한다고 할지라도 교과서 서술의 오류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국가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 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 과정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자율에 넘겼다가 막상 교과서가 개발되고 활용된 연후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통째로 국가에 책임을 되묻고, 심지어 엄청난 힘과 예산을 들여 뒷수습하는 사례를 이미 지난 검정에서도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민간 영역에 교과서를 송두리째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중국 제도의 양면이 가지는 의미와 효용성을 한 번쯤 재고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1) 教學大綱이 소련식 교육과정으로 교육 내용 중심의 일원화된 규정이었다면, 課程標準은 서구식 교육과정 표준으로 교육과정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2) 浙江省教育廳關於實施教育部, '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試行)'의意見'. (http://www.zjedu.gov.cn/gb/articles/2005-05-08/news2005050_8160219.html)
- 3) 湖北省教育廳, 我省基礎教育課程改革實驗工作正式啓動, http://www.hbe.gov.cn/e21web/jyt/article_show.php?article_id=134.
- 4) '義務教育新課程全面推開'. '中國教育報' 2005年 9月 1日. (<http://www.moe.edu.cn>)
- 5) '普通高中新課程實驗省區聯席會召開'. '中國教育報', 2005年 11月 30日. (<http://www.moe.edu.cn>) 이에 따르면 현재 고급중학교의 실험 적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江蘇, 山東, 廣東, 海南, 福建, 遼寧教育廳임을 알 수 있다.
- 6) 1차는 1986년 4월 5일, 10년 전 서거한 주은래를 추모하기 위하여 모인 집회에서 문화 대혁명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비난과 반대의 시위로 시작되었으며, 다시 1989년 6월 4일에 북경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맨손으로 대항하고 그에 탕크를 앞세우고 말포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사건이다.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64 천안문 사건, 64 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천안문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 7) 이러한 고민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文化熱'이라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열에 의한 개혁 논의는 크게 儒學復興論, 批判繼承論, 西體中用論, 徹底除去論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학 부흥론은 대만 등의 경제 성장을 낳은 기본 동인이 유교 문화를 근거로 한 근면성, 교육열, 가족주의에 있음을 주목하고, 신유가주의적 입장에서 중국의 발전을 전망하였으며, 비판 계승론은 중국의 낙후를 인정하되 사회주의는 인류가 구현한 가장 선진적 체제라는 원칙하에 중화 의식을 견지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한편, 서체 중용론은 전통적 '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중국은 사회주의를 가장한 전근대 사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철저 제거론은 더 나아가 중국의 현행 통치 구조를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정체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공산당은 전통 관료와 유사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서체 중용론과 철저 제거론은 천안문 사건 이후 거의 활동을 정지당했으며, 현재의 공산당의 기본 방침은 비판 계승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1994), 『현대 중국의 모색』, 동녘.)
- 8) 江澤民. '愛國主義和我國知識分子的使命-總書記在首都

- 青年紀念“五四”報告會上的講話(1990年5月3日)-'. 『中國教育年監』. 1991, 人民教育出版社. 1992, 1~2쪽.
- 9) 심정제는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집 출판하고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 행정 기관이 교육과정(현재는 '교학 대강'과 '과정 표준'이 혼재)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이에 합격한 교과서를 각지에서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굳이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심정제와 동시에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집, 출판, 발행하고, 각 학교가 자유로이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발행제와 같은 자선(自選) 제도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10) 中小學教材編纂審定管理暫行辦法, 中小學教材價格管理辦法 등이 차례로 공포되었다. 이는 각종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무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11) 중국의 교과서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유리. 「중국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특징」. 고구려연구재단 연구 총서 18. 『중국의 역사 교육과 교과서』. 고구려연구재단, 2006.
 - 12) 편찬 인원의 자질로서 당의 교육 방침 이해, 중소학 교육 및 교육 개혁의 발전 추세 이해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교재의 특색을 보장하기 위해 교재의 주편과 주요 편찬 인원은 두 별 교재의 편찬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 13) 현재 전환되고 있는 과정 표준 체제는 각 과목별 '과정 표준'(각론에 해당)과 '과정 방안'(총론에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14) 이러한 조치가 출판 단위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자기 검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차원의 권고 또는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인민교육출판사가 그동안 중국 전역에서 활용되는 교과서를 개발해 왔음을 감안해 볼 때, 반관반민의 과도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5) 심사 위원은 전국중소학교재심정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력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 16) 교학용서 목록에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도 포함된다.
 - 17) 1992년 반포된 '9년제 의무 교육 소학 초급 중학 교재 채택 업무에 관한 의견(關於九年義務教育小學 初級中學教材選用工作的意見)'에 따르면 소학교의 교재는 縣 수준의 교육 행정 기관에서 채택하고, 초급중학교 교재는 省이나 지방 市 수준의 교육 행정 기관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학교 자체적으로 교재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글 | 이충호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I. 서 언

시대가 변하여 사회 구조가 바뀌는 등,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교육의 양상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도 교육 개혁에 고심하고 있다.

2006년 12월 15일, 일본 의회는 ‘교육 헌법’이라고 불리는 교육 기본법¹⁾을 통과시켜 구체적인 교육 개혁 방향을 결정하였다. 아베 전 수상은 정책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육 개혁이었는데, 이로써 교육 기본 3법²⁾을 마련하여 교육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아베 전 수상은 그 직속으로 교육재생위원회³⁾를 조직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후쿠다(福田)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그대로 추진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그 큰 줄거리는 변함없을 것으로 보이며, 2008년 1월 31일에 최종 보고서를 끝으로 교육재생위원회의 기능이 끝났으므로 새로운 형태로 재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

II. 일본의 교육과정 개정 동향

중앙교육심의회의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심의를 거듭하여 금년 1월 17일에 답신 보고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 지원 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 등의 개선에 대해서)를 정리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이 답신을 받아 ‘살아가는 능력’을 육성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1) 일본의 편수 기구

일본 문부과학성의 직제에서 관련 조직을 보면 초·중등교육국,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기획실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는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 교육과정부회⁵⁾로 구성되어 있다(2007년 4월 현재).

교육과정부회에는 초·중·고등학교부회가 있고,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를 비롯하여 과목별 전문부회로 18개 부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수상 직속 기관으로 교육재생회의(2008. 1. 31. 완료되고 그 계승 기구인 교육재생간담회가 3월 초에 발족 예정)가 있다.

(2)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현행 학습 지도 요령(교육과정)의 이념인 ‘살아가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그 기본 방향이다. 이 이념은 새로운 학습 지도 요령에서도 연계된다고 한다.



‘심의 내용의 정리’ 팸플릿(교사용)

■ ‘살아가는 능력’

- ◆ 기초 기본을 확실하게 익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도 스스로 과제를 찾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
- ◆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감성 등이 풍부한 인간성
- ◆ 씩씩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이나 체력 등

■ ‘살아가는 능력’을 육성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방법과 과제

- ◆ ‘살아가는 능력’의 의미나 필요성에 관한 공통 이해
- ◆ 수업 시수의 확보 등

교육 기본법이나 학교 교육법의 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능력’을 육성하는 학습 지도 요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확립하는 관점에서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의 관점

- ◆ 개정 교육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 학습 지도 요령 개정
- ◆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이념의 공유

- ◆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 기능의 습득
- ◆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
- ◆ ‘확실한 학력’의 확립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
- ◆ 학습 의욕의 향상이나 학습 습관의 확립
- ◆ 풍부한 마음이나 튼튼한 신체의 육성을 위한 지도의 충실

■ 초·중·고등학교의 표준 수업 시수의 변동 내용

특징적인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공히 총 수업 시수가 증가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외국어(영어) 활동 시간이 첨가되었다. 종합 학습 시간은 초·중·고 모두 줄어들었고,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체육의 시간이 증가되었다. 중학교 역시 동일한 현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가장 많이 증가), 보건·체육, 외국어 시간이 증가되었고, 선택 교과가 누락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새 교육과정의 특징은 주요 교과의 수업 시수를 증가하는 방침을 통해 현행의 ‘여유 있는 교육’을 벗어나 지식 위주의 교육 방향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표】 초·중·고등학교의 표준 수업 시수(변동이 있는 교과만 정리)

교과	국어		사회		산수·수학		자연·과학		체육		외국어		선택 교과		총 시수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초등학교	1377	1461	345	365	869	1011	350	405	540	597	0	70	-	-	5367	5645
중학교	350	385	295	350	315	385	290	385	270	315	315	420	155~280	0	2940	3045

※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초등학교 외국어는 5~6학년의 시수임.

(3)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

- ▶ 2007년 11월 7일
교육과정부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정리⁶⁾
- ▶ 2007년 12월 26일
중앙교육심의위원회(中敎審) 메시지를 추가
- ▶ 2008년 1월 17일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및 특별 지원 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 등의 개선에 대해서」(답신)를 정리

- ▶ 2008년 1월 18일
향후의 스케줄에 관한 교육과정부회 사무국의 통지를 게재
- ▶ 2008년 1월 30일
유치원 교육 요령 개선의 방향에 관한 좌담회 개최

2008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 총회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 지원 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 등의 개선에 대해서」(답신)를 정리했고, 渡海文部科學大臣은 다음과 같이 향후의 일정을 발표했다.

- ◆ 본 답신에 나타난 제언을 접수받고, 즉시 초 중 학교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 작업에 들어가 2월 중순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표하고, 1개월간의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 후, 금년 내에 개정을 완료한다.
- ◆ 새 학습 지도 요령의 실시는 교과서 준비로 시간이 걸리지만, 2008년도에 확실히 주지한 후에 2009년도부터 가능한 한 선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 ◆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은 내년도에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한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08년 2월 중순에는 초 중 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 후, 2009년도부터 이행 조치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부터, 중학교에서는 2012년도부터 완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5일에 예고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 내용은 새 학습 지도 요령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으면 제시할 수 없지만, 향후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과 병행하여 우선 지도 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산수 수학, 이과를 대상으로 깊이 검토하여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Ⅲ. 교과서 발행 제도의 개요⁷⁾

교과서가 검정,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때까지의 경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편집

현재의 교과서 제도는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의 저작 편집이 기본이다. 각 발행자는 학습 지도 요령,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검정 신청한다.

(2) 검정

교과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쳐서 자격이 주어진다. 발행자가 검정 신청하면 그 도서는 문부과학성 내의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 내용이 첨부되는 동시에 문부과학대신의 자문 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⁸⁾ 자문을 받게 된다. 심의회에서 답신이 이루어지면 문부과학대신은 이 답신에 근거해 검정을 실시한다(문부과학성 교과서과 담당).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의 심사는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에 근거해서 실시된다.

(3) 채택

검정필 교과서는 통상 1종목(교과서의 교과별로 분류된 단위. 예 : 초등학교 국어(1~6년),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 고등학교 수학 등)에 대해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한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채택은 공립학교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국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채택된 교과서의 수요를 문부과학대신에게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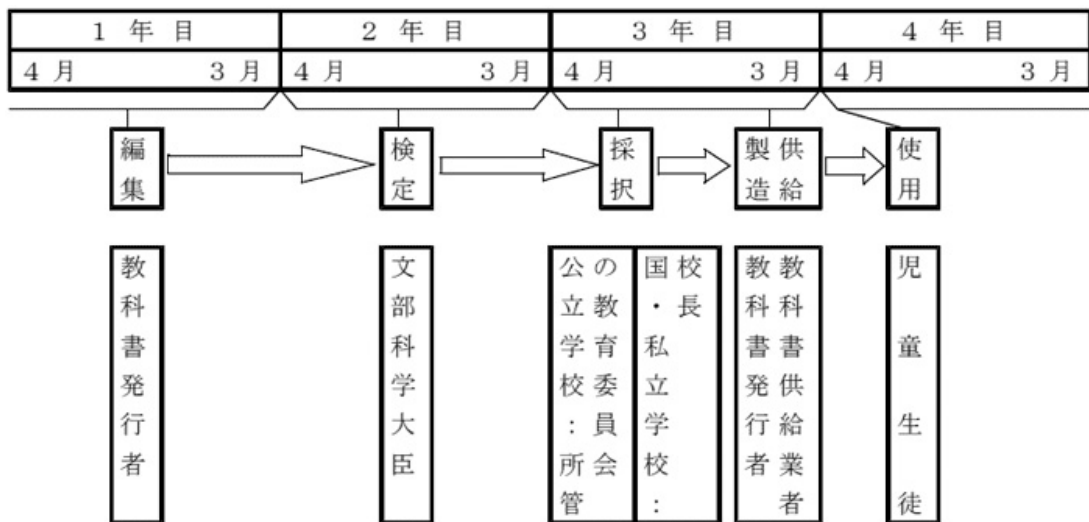
(4) 발행(제조 공급)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된 교과서의 수요 집계에 근거하여 각 발행자에게 발행해야 할 교과서의 종류 및 부수를 지시한다.

(5) 교과서의 무상 급여

국 공 사립의 의무 교육 학교(초 중학교,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및 특별 지원 학교의 초 중학교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전 학생에 대하여 국가 부담으로 무상 급여되고 있다.

【그림】 교과서가 사용되기까지의 과정



(주) 제조 공급, 사용의 시기는 전기용(前期用) 교과서의 예를 따름.

【표】 소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 검정 채택의 주기(周期)

◎ : 검정 △ : 채택 ○ : 사용 개시

학교 종별 연도 구분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학교	검정	◎		◎			◎				◎		
	채택		△		△			△				△	
	사용 개시			○		○			○				
중학교	검정		◎	◎				◎				◎	
	채택			△	△				△				
	사용 개시				○	○				○			
고 등 학 교	저학년	검정			◎				◎				
		채택					△			△			
		사용 개시	○					○			○		
	중학년	검정					◎			◎			
		채택	△					△				△	
		사용 개시		○					○				○
	고학년	검정	◎					◎				◎	
		채택		△					△				△
		사용 개시			○					○			

IV. 맺는말


이상으로 일본의 새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과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교육과정(학습 지도 요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대략적인 안은 발표되었다.

새로 발표될 교육과정의 내용(안)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2월 16일에서 3월 16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교육과 교육과정기획실에서 확정,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일본 교육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일본은 교육 기본법 개정 등 일련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일본 교육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실시해 온 ‘융통성(유도리)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종합 학습 시간을 대폭 줄이고, 주요 교과목의 시간 수를 늘리겠다는 것 때문이다(수업 시간 10% 증가). 그리고 교원 정책에 대해서는 부적격 교원 배제와 연계되는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10년마다 재교육), 부교장, 주간(主幹) 교사 제도⁹⁾의 도입, 교육청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통제 강화, 외부 기관에 의한 학교 및 교육 위원회의 외부 평가제 실시, 시 정 촌(市町村) 등 지방 자치단체 교육위원회로 교원 인사권 이양 및 소규모 교육 위원회 통합 등의 전면적인 제도 개혁도 아울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가운데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학교 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변신해 갈 것인지는 의문이며, 이에 대한 교원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원이 현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의 계획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의 ‘유도리 교육’이 현장에까지 침투되지 않은 이유도 교원들에 대한 홍보 부족¹⁰⁾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교원들의 근무 조건은 매우 힘들고(대부분이 매일 12시간 근무),¹¹⁾ 열악한 교육 재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 면허 갱신법’, 즉 지방의 교육위원회 지도 감독권 강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기르고 학교에 부교장, 주간 교사를 두는 것, 2009년부터 교원 면허를 10년 주기로 갱신한다는 내용으로 2007년 6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추진하고 있다.

- 3) 교육재생회의는 교육 개혁(재생)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베 내각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기관이다. 아베 내각에서 2006년 10월 10일의 각의 결정에 의해 설치되었다. 담당실은 내각관방에 소속되었다. 이 회의는 1차(2007. 1. 24.), 2차(2007. 6. 1.), 3차(2007. 12. 25.), 최종(2008. 1. 31.)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해산되었다.
- 4) 교육재생간담회(가칭)가 2008년 2월 25일에 모임을 가졌고 교육재생회의의 후계 조직으로 3월 초에 출범. 게이오 대학 총장인 안자이 유이치로(安西祐一郎) 등 약 10명으로 구성.
- 5) 18개 부회로는 교육과정기획특별부회, 국어전문부회, 사회·지리역사 공민전문부회, 소학교 중학교 사회전문부회,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전문부회, 산수 수학전문부회, 이과전문부회, 소학교 중학교 이과전문부회, 고등학교 이과전문부회, 외국어전문부회, 가정, 기술·가정, 정보전문부회, 예술전문부회, 풍부한 심성을 기르는 교육 방법에 관한 전문부회, 생활 종합적인 학습시간전문부회, 유치원교육전문부회, 특별지원교육전문부회, 산업교육전문부회로 되어 있다.
- 6) 「심의의 정리」 전문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DF:910KB 참조.
- 7) 출처: 2007년 7월, 文部科學各省 初等中等教育局.
- 8)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2000. 6. 7. 개정). 내각은 일본문부성 설치법(昭和 24년 법률 제146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조직) 제1조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는 위원 30명 이내로 조직한다. 현재 위원 16명, 회장 7명, 회장 대리 8명,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 연 1회(2002년 4회) 개최한다. 교과서 제도의 개선, 교과서 평가 인정 기준,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교과서검정조사심의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 금년도 총회(2008. 2. 28. 도쿄, 회장은 스기야마(杉山武彦, 히도츠바시대학 총장)): 議事の 투명성과 검정 절차 개선, 새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 검정 기준의 재검토에 대해 심의하도록 요청. 검정 절차 개선과 검정 기준 재검토를 각각 심의하는 2개의 워킹그룹(WG) 설치. 검정 절차를 개선하는 이 기구는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는 심의에 대해서 공개나 회의록 작성 방법, 전문적 내용을 검정할 때의 위원 구성의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일본신문, 2008. 2. 29.).
- 9) 우리나라의 수석 교사 제도와 비슷함.
- 10) 중앙교육심의회가 융통성 교육에 대해 맹렬히 비판(2007. 10. 31. 산케이 신문)
- 11) 교원 자살로 공무 재해 신청 「휴직 직전까지도 과중한 노동」(서일본신문, 2007. 12. 25일자), 정신성 질환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휴직이 사상 최고인 4,675명(마이니치신문 2007. 12. 29일자)로 보도됨.

1) 제16회 국회에서 통과(2006. 12. 15.)된 이 법은 1947년 이후 처음 개정되어 동년 12월 22일 공포, 시행되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전문 18조(중전 11조)로 공공의 정신을 존경한다고 명기하고,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또한 평생 학습의 이념, 가정 교육 등의 조항도 삽입했다.

2) 교육 기본 3법은 ‘지방 교육 행정법’, ‘학교 교육법’,

프랑스의 교육과정, 이렇게 개정된다¹⁾

글 | 김차진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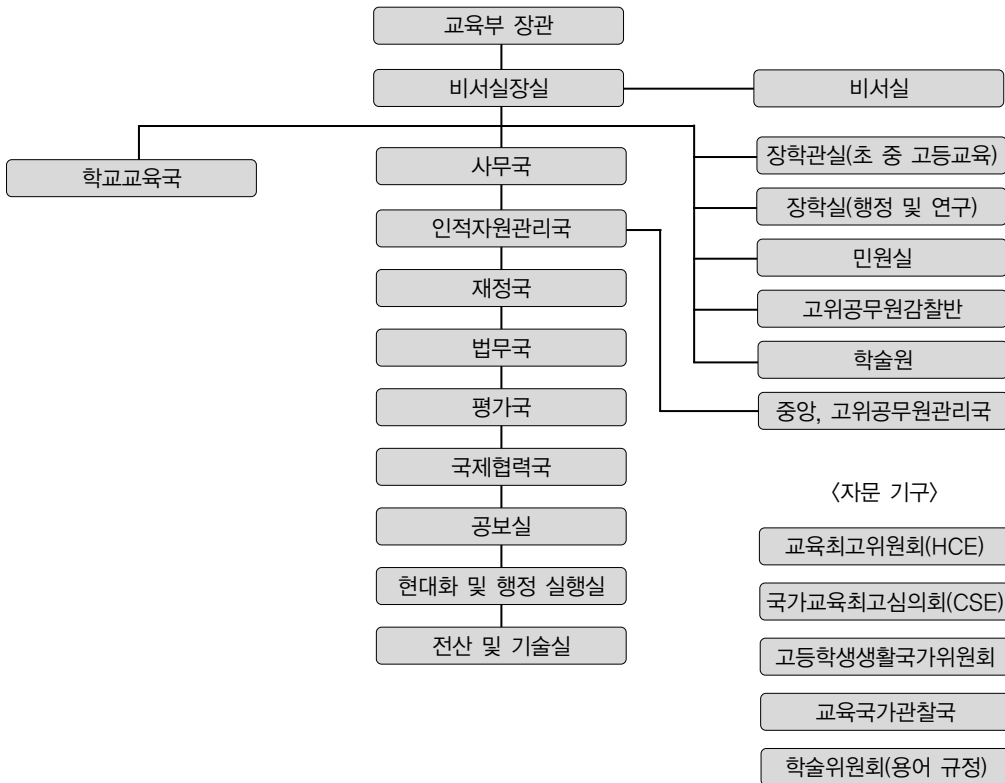


I. 교육부 직제

(1) 총괄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인 비서

실(Cabinet)을 비롯하여 7국 3실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과정과가 속해 있는 학교 교육국은 프랑스 교육부의 중핵(中核) 부서로서 초 중 고등 학교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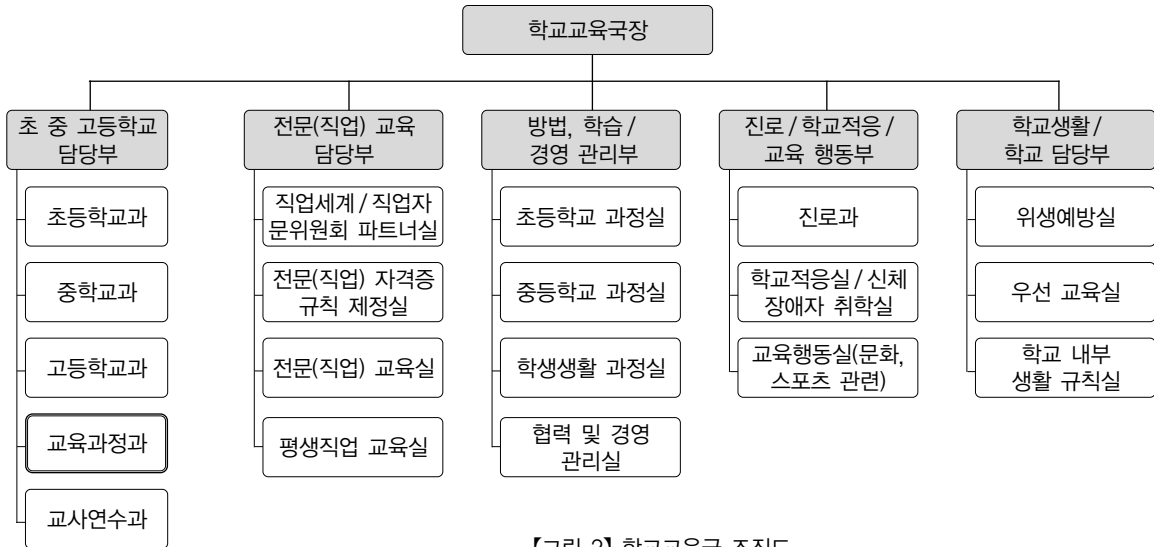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 교육부 조직도

그 외에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최고위원회(HCE)와 국가교육최고심의회(CSE)를 포함한 5개의 자문기구를 두고 있으며, 기타 조직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업무 자체를 매우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다.

(2) 학교교육국



【그림 2】 학교교육국 조직도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정과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발의와 동시에 전문가 그룹 등 관련 기구 및 인사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물질적인 면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동안 전문가 그룹과 교육 시스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육과정 개정안이 완성된 후에는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발표한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구성원의 역할

학교교육국의 구성원은 대개 전공별로 안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과정과는 교과목별 전공자를 배치하여 과목별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교육부 장학사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로는 교육부가 특정 자리에 앉힐 사람을 공모를 통하여 선발하게 되는데 초등은 교사 경력 5년 이상, 중등은 3년 이상인 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에 의해 선발된다.

프랑스는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의 신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다. 교

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고 교과서 집필 시 출판사들의 주요 포섭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론 예전에는 공개를 했지만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기밀이 누출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이후로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II.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집단(GEPS)

(1) 조직

GEPS(Groupes d'Experts pour les Programmes Scolaires)는 교과 교육 전문가 집단을 이르는 명칭으로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짜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1989년 교육 기본법 및 1990년 2월 23일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출범한 기구이다.

1998년까지 동 업무를 맡아오던 전문 교과그룹(Groupes Techniques Disciplinaires:GTD)이 2000년도에 개명된 것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교육 방향을 토대로 교과별, 통합 교과별 또는 교육 수준별 전문가 그룹이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명시하는 교육과정 시안

을 수립' 하는 일이다.

(2)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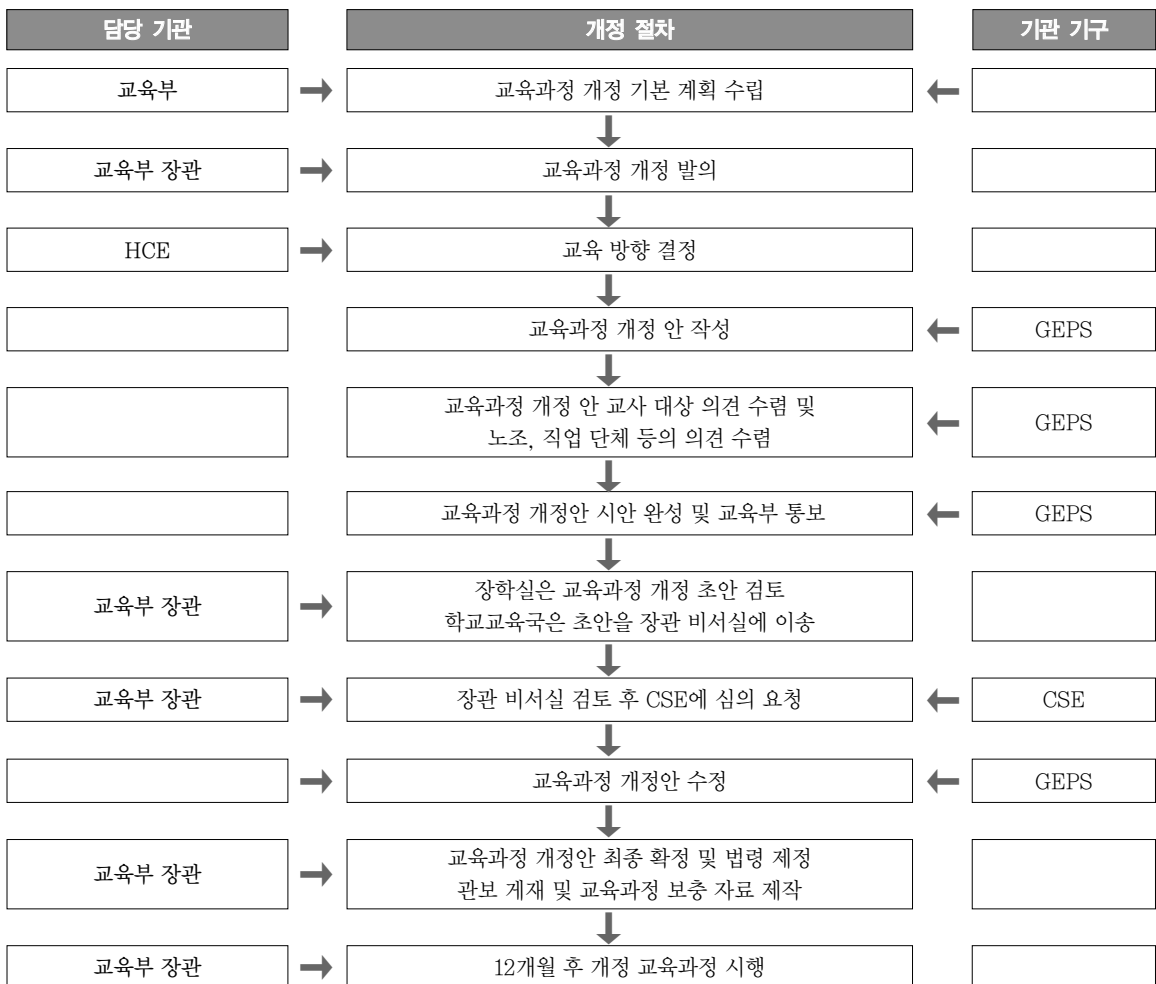
구성원의 임기는 5년이며, GEPS의 단장이 지정하고 장관이 임명한다. 과목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70~7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룹 당 구성원은 12~15명이다.

위원장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임명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교수 중에서 1인을 임명한다. 기타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일반 장학사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급별, 과목별 내용에 따라 책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GEPS 단장의 중요 임무와 역할은 크게 3가

지로 요약된다.

- ① 일반장학국 담당 장학관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교과 개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한다.
- ② 그룹 공동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룹의 회의와 대외적 토론을 주도하여 CNE (Comite national d'evaluation; 국립평가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이 확정한 전체 방향 안에서 교과 교육과정 개혁의 기본 방향과 대원칙을 수립한다.
- ③ 각 교과 그룹별 작업을 조직, 총괄하는 한편, 전체 회의를 통해 각 교과 그룹 간 작업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전체 개정 일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교육과정 개정 절차



프랑스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과 시수(horaire)/교과 교육 내용(programmes)/
교수 지침(instruction)을 통틀어 이르며,
이것은 'Horaires-Programmes-Instruction'이라는 이름의 소책자로 발간된다.
이 중 교과 시수와 교과 교육 내용은 법령인 décrets로 고시하여
법규정적인 효력을 갖지만,

IV. 교육과정 개정 형태

(1) 총론 각론(교과 등) 개정 관계

① 총론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교과 시수(horaire)/교과 교육 내용(programmes)/교수 지침(instruction)을 통틀어 이르며, 이것은 'Horaires-Programmes-Instruction'이라는 이름의 소책자로 발간된다. 이 중 교과 시수와 교과 교육 내용은 법령인 décrets로 고시하여 법규정적인 효력을 갖지만, 교과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포함하여 교수 학습 방법을 풀어서 부연 설명하는 교수 지침은 회람(circulaire)으로 공개되어 법규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이 소책자가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각론, 즉 교과 교육과정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총론이라고 부르는 학교 교육의 목표나 학교 교육 활동과 같은 부분은 (교과 교육 시수 부분 외) 프랑스에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런 일반 교육과정적인 조직과 운영 측면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각자 서로 다른 형식으로 공고된다.

일반적으로 학교 조직이나 주기 조직 또는 전공 계열 조직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법령인 décrets로 제정하고, 교육 내용에 관련된 사안들은 시행령(Arrêtés)으로 공고하며, 연간 학사 일정(rentree scolaire)이나 특정 기제의 수립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사안은 회람(circulaire)으로

공고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교육부 관보에 Encart(행정 조직)라는 이름 아래 구체적으로 게재된다.

② 각론(교과 등)

총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론 또한 큰 틀을 일시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부분적으로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교과를 동시에 개정하는 우리나라 방식을 프랑스 제도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③ 총론 각론 개정 시점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장관이 직접 발의한다. 다만, 총론과 각론은 그 구속력의 강도에 따라 법(loi)→고시(décret)→시행령(Arrêtés)→회람(circulaire)으로 위계화하여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큰 틀은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회람 정도는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 고시,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교육과정 개정 간격

① 개정 시기 역사

프랑스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한 첫 공공 지침(instructions officielles)은 18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프랑스 교육과정의 원조이다. 1887년의 이 교육 지침은 1923년의 교육 개혁에서 그대로 답습되어 1975년 아비 교육부 장관이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할 때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1975년의 아비 교육과정은 1985년에 유 초등 교육 주기에 맞추어 재개편되었다.

이 1985년의 주기별 교육과정은 최초로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또한 최초로 전국 교원 집단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이후 2004년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전국 교원 집단 여론 수렴 방식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하였다.

1992년에 다시 초등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는데 주안점은 활동 중심 능동적 교수 학습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교육부는 1999년 ‘2000년대의 중학교’라는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개혁 영역은 학생 개인 지도를 위한 방안, 국어 사용 능력, 다양한 진로 지도와 과목 간 연계 학습, 기술 교육,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편, 프랑스 교육부는 1998년, ‘고교에서는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가?(Quels savoirs à enseigner au lycée?)’라는 주제로 심층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국어, 역사, 지리를 비롯한 전 교과에 의미(지식)와 방법(기술)을 동시에 습득하게 하는 교수 학습 내용과 활동이 요구되었으며, 이때부터 중등의 모든 교육과정에 교과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전 교육과정에 도입된다.

1998년도부터 고교 교육과정 개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2년에 프랑스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손보게 된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개정은 프랑스 교육과정 개정사에서 상당히 드문 행보로서 계층 불평등으로 인한 학교 폭력과 학업 실패 등이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서 이 단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교육부는 이러한 경험적 시도를 바탕으로 하여 2006년에 ‘공통 기초 교육 지식 및 능력(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것은 초 중등 의무 교육(6~16세) 기간에 걸쳐 모든 학생이 습득해야 할 지식 및 능력을 정의한 것으로서 기존의 교과별 교육과정을 주요 7대 목표 능력을 중심으로 습득해야 할 지식을 횡적, 종적으로 풀어서 연계한 교육과정이다.

② 개정 간격

프랑스의 교육과정 개정 주기 간격은 계열 또는 교과에 따라 다소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교육부의 목표는 최소 10년 주기로 각 계열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 과정의 사이클에 맞추기 때문에 중등 개혁의 경우, 중 1년 반과 고 1년 반을 그 시발점으로 하며, 초기 실행 단계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4년, 고교 3년이 걸린다. 여기에 개정 전의 장학관이나 특임 연구단에 의한 현장 조사나 진단 연구, 그에 따른 교육 전문가들 간의 상반된 의견 교환과 대립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3년은 소요된다.

그리고 개정이 완료된 후에도 신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학습 결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하는 후기 추수 지도 및 평가 과정 2~3년을 포함하면 중등 교육과정 개편에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는 어림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프랑스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현재 주기는 상당히 현실을 고려한 개정 간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개정 범위

프랑스에서의 교육과정 개정은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른다. 먼저, 모든 교육과정 개정

프랑스에서의 교육과정 개정은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른다.
먼저, 모든 교육과정 개정은 반드시 학교급별로 하되,
저학년에서 고학년 순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은 언제나 유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교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정을 한다.

은 반드시 학교급별로 하되, 저학년에서 고학년 순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은 언제나 유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고교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개정을 한다. 그리고 각 학교급 단위에서도 반드시 학년순으로 순차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고교는 계열별로 교육과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편은 반드시 계열별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개정 범위를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별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교육 수요자의 충격과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의도에서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초등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화되는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학습의 시발점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층 간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국어 사용 능력과 문화 지식 습득을 강조하였다.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도구로서의 국어 사용 능력을 사회 불평등 해소의 한 방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과정의 내용 개편에서 필수적으로 제고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계열별, 교과별 학습 목적 및 목표
- 계열 전체의 교육과정 조직 체계
- 계열 주요 교과 간의 내부적 균형과 시수 균형
- 계열별 교과 특성에 따른 교수법 선택 문제 (지식 습득 중심, 활동 중심이나? 귀납적, 연역적이나? 등)

- 그에 따른 바깥로레아에 새 평가 방식 도입 문제

V. 요약 및 결론

모든 교육과정 개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은 ‘개정이 왜 필요한가?’, ‘어떤 교과와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수 지식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학교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우 몇 년 단위로 지식의 양과 내용이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교육과정을 과거와 같이 지식 위주로 짤 수가 없으며 스스로 지식을 찾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방법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짜야 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한편, 교육과정 개정의 당위성 확인과 내용 선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개정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했는가 하는 추진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주관자의 합법성과 개정 추진 단계에서의 민주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개정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치성을 띠거나 띠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 실천가의 관점에서는 그 현장 밀착성으로 인하여 교육의 근본 목적을 거시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렵고, 국가 주도의 교육 개혁은 하향 전달식이어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양쪽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법제적 측면에서 교육 개정 안을 총론과 각론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개정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법(loi)→고시(décret)→시행령(Arrêtés)→회람(circulaire)으로 위계화하여 구속력의 강도를 달리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큰 틀은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의 수시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장학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장학관들은 현장 진단 기초 연구에서부터 교육과정 집필과 교사 여론 수렴, 그리고 현장 적용과 교원 교육 및 추수 지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에게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장학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고하게 해 준다.

셋째, 여론 수렴 및 심의 과정이 매우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시안 개발 단계에서 개발단은 교사 단체 대표와 학부모 대표 및 기타 교육 단체나 관련 기관 대표들과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회나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집필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완성된 시안을 제도적 기제(아카데미별 장학청)를 통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되 학부모와 같은 비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인 장학단과 전국의 관련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종합 분석과 피드백 단계를 거친다.

또, 미시적인 관점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지역별, 학교별 교육과정을 건드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다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가-지역-학교 교육과정 간에 위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수시,

상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범주 설정이 없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연**

1) 이 원고는 2007년도에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 연구」 결과물을 요약, 정리한 것임.

영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글 | 최봉섭 (주 영국 비컨리서치 대표)



영국의 교육부는 국정 교과 과정(National Curriculum,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해당)을 설정하여 이것을 각 학교에 내려 보내고, 교사는 이것에 따라 교재를 만들거나 선택하여 가르친다. 국정 교과 과정을 보면 과목 당 의무 교육 11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약 100쪽 분량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내용’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나열해 둔 것이다.

영국에는 국정이나 검정 같은 교과서가 없고, 교사가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없다. 민간 출판사에서는 교사가 국정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 발행제’이다. 한국의 교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과서’, ‘교재’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에는 ‘교과서’라는 것이 없고, 국정 교과 과정과 교재만 있다. 15세와 18세 사이, 4년 동안에는 ‘어워딩 보디’가 출판하는 교재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재’ 중의 ‘주된 교재’일 뿐이지 ‘교과서’가 아니다. 영국의 교과 과정 통제와 관련된 기관별 역할이나 연관 관계를 단락별로 나누어 서술해 보기로 한다.

I. 국정 교과 과정(NC, National Curriculum)

영국은 1988년까지 정부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각 지방별 대학의 부속 기관으로 있던 ‘학

력 자격증 인증 기관(어워딩 보디, Awarding Body)의 시험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1988년 Education Reform Act’에 의해 교육부는 국정 교과 과정을 편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고, 교사들에게는 어떤 주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설정되었다.

영국의 학제는 다음의 표에서 보이듯이 유치원 2년, 초등 6년, 중등 7년, 그리고 대학 3년제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중등 교육은 7년으로 묶여지지만, 교과 과정에 따라 나누면 ‘Key stage 3 과정-3년’, ‘GCSE 과정-2년’, ‘6th form 과정-2년’으로 3등분 된다.

17~18세의 과정(6th form 과정)은 의무 교육 과정이 아니며 국정 교과 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과정은 ‘대학 입학 학력고사 준비 과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등학교와 유사하나 교과 과정은 학생이 택한 진로에 따라 통상 3과목만 공부를 하게 된다.

15세와 16세 사이의 교육과정은 국정 교과 과정에 포함되며(Key stage 4), 중등 전기 과정 ‘Key stage 3’과 함께 학교에 따라 통상 9개에서 11개 과목을 가르친다.

초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Key stage 1과 2’는 영어, 수학, 과학, ICT 네 과목을 제외하고는 통합 교육과정 형태로 제공되고 과목별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리고 QCA가 실시하는 ‘전국 초등학교 과정 공통 평가 시험(QCA Test)’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이 세 과목만 평가를 한다.

연령	학년	학제	NC	교육과정	의무 교육	교과서 통제
21		대학				
20						
19						
18	6TH	중등		GCE A-level	정부 재정 지원 의무 학생 출석 의무 없음.	어워딩 보디
17	form					
16	11		국정 교과 과정	GCSE (KS4)	정부 재정 지원 의무 학생 강제 출석 의무	
15	10					
14	9	초등		KS3		자유 발행제
13	8					
12	7					
11	6			KS2		
10	5					
9	4					
8	3					
7	2			KS1		
6	1					
5						
4		유치원			정부 재정 지원 의무 학생 출석 의무 없음.	

15세와 16세 사이의 과정(Key stage 4, GCSE 과정)은 의무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단계로서, 교육과정은 국정 교과 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졸업 시험은 어워딩 보디가 실시하고 교육부(QCA)가 따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2년 동안의 교재는 어워딩 보디가 만들어 내고, 학교는 어워딩 보디가 만들어 낸 교재를 쓰게 된다.

17세와 18세 사이의 교육과정(6th form, GCE A-level)은 국정 교과 과정이 없으며 순수하게 어워딩 보디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어워딩 보디가 만들어 내는 교재와 문제집들을 사용한다.

II. 어워딩 보디(Awarding Body, 자격증 수여 기관)

대학 이하의 교육 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수학했다.’고 증명하는 졸업장이 없고, 졸업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학력 자격증’이 발급된다. 따라서, 졸업 시험에 실패할 경우, 11년간 수학했다는 증

명서가 없다. 이러한 졸업 시험이 외부 학력 평가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데 이 외부 평가 기관이 바로 어워딩 보디이다. 학력 자격증 시험(졸업 시험)은 의무 교육이 끝나는 16세에 GCSE, 그리고 18세에 GCE A level 시험이 있다.

직업 교육 영역의 어워딩 보디는 수백 개가 넘지만, 인문 학교 영역의 자격증을 통제하는 어워딩 보디는 현재 3개가 있으며, 이들은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Edexcel,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지역의 OCR, 그리고 전국 단위의 AQA가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전신은 각 지방의 주요 대학 부설 기관으로 존재했으며 1990년대 중반,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통폐합을 거쳐 현재는 3개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의 건물은 아직도 런던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의 부속 건물에 남아 있다.

이러한 어워딩 보디들은 학력 평가 시험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교재나 시험 문제집들을 출판한다. 그리고 학교들은 어떤 어워딩 보디의 시험을 준비할지 선택하고, 그에 맞추어 코스를 선택하고, 교

재를 선택한다. 어워딩 보디가 3개라는 말은, 한 국형 수능 시험이 세 개의 기관에서 제각각 실시된다는 뜻이다. 이 3개의 어워딩 보디가 실시하는 시험 사이의 난이도 조정 또는 조율은 QCA가 하고 있다.

Ⅲ. QCA(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이 기관은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며, 그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각종 자격증 수여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행되는 자격증들을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인지 통용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NQF는 발상은 자격증의 틀을 바둑판처럼 만들어 가로로 5등급(16세 기본 요구 수준, 18세 대입 수준, 21세 대졸 수준, 22세 석사 수준, 그리고 박사 수준으로 분류했다가 2007년에 8 등급으로 더욱 세분화했다.)으로 나누고, 세로로는 각 인문의 학과목이나 실업 예술 영역으로 나누어, 각 칸에다가 일정 기준을 정해 두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격증은 그 칸에 넣고 있다.
- ② 16세 이하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국정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으로 편제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 기간 내(16세 이하)에서는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와 같이 수준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짜 두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수준별(Key stage별)로 짜 두고 있어, 5학년 교실에서 학과목에 따라 4학년 수준을 공부하는 아이도 있으며 6학년 수준을 공부하는 아이도 있다.
- ③ 전국 공통 평가 시험:이상의 각 Key Stage

가 끝나는 시점, 2학년, 5학년, 9학년, 11학년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를 실시한다. 이 시험의 결과는 과목별, 학교별 평균 성적으로 공표된다. 이러한 전국 공통 평가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아동의 학력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하고 교육부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교나 교사의 평가 수단으로 활용된다.

QCA는 교육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지만 교육부 내의 한 부서가 아니고 독립된 공사(公社, QUANGO) 형태이다. 이 공사의 수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을 하지만 운영 형태는 산업체 대표,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 방침을 결정한다.

영국의 국정 교과과정은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설정 반포되었다. 다시 말해 1988년 이전에는 학교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모두 지역 교육청과 (주로) 학교에 일임되어 있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실의 교사에 맡겨져 있었다.

1988년 국정 교과 과정이 설정 반포될 무렵, 교사 노조에서는 교사의 전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학계에서도 국정 교과 과정의 정립이라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였지만 그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부가 설정한 국정 교과 과정은 상세한 서술은 달지 않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명시하고 교사의 재량권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 설정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명시한 국정 교과 과정은 의무 교육 기간 11년 동안 가르쳐야 될 분량이 과목별로 100쪽을 넘지 않는다. 쉽게 말해 ‘뼈대’만 서술해 두고 나머

지 부분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 두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이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기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한국처럼 교과 내용에 직접 통제를 가하지 않고, 시험이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원거리 통제’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IV. 학 교

학교의 교과 과정은 QCA 시험을 통해 직접 통제를 받는 초등부와 어워딩 보디의 시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받는 중등부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교재는 완전 자유 발행제이다. 다양한 출판업자들이 국정 교과 과정의 틀에 맞추어 민간 출판사들이 교재를 만들어 학교마다 카탈로그 형식으로 만들어 배포를 하거나 영업 사원이 와서 새롭게 개발한 교재의 설명이나 활용법을 알려 주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컴퓨터를 활용한 교재의 개발이다. (참조: <http://www.lcpuk.co.uk/index.php?cid=1>.)

학교에서 이런 카탈로그는 과목별 주임 교사에게 먼저 전달이 되고, 주임 교사는 이러한 카탈로그에서 교재들을 선택하여 동료 교사들과 협의를 하고, 여기서 결정된 교재는 교감이나 교장의 결재를 얻어 구입하게 된다.

(2) 중등학교

영국의 학제는 ‘초(6)–중(5)–고(2)–대(3)’제이며, 중등 학교 중에 16세까지 교육하는 5년제 학교와 18세 과정까지 제공하는 7년제 학교가 있다. 5년제 과정도 전기 과정 3년과 후기 과정 2년으로 나누어지며, ‘전기 과정’은 국정 교과 과정

의 Key Stage Level 3의 단계(7, 8, 9학년 과정)이며 이 교과 과정은 교육부(QCA)의 시험에 의해 통제된다.

하지만 ‘후기 과정’ 2년(GCSE 과정, 10~11학년)은 의무 교육 마지막 과정으로서 학력 자격증이 발부되며, 이 과정의 학력 평가 시험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 어워딩 보디가 평가를 하며, 이 과정의 교과 과정은 교육부(QCA)가 제정한 국정 교과 과정의 조건을 만족시킨 어워딩 보디의 교재에 의해 통제된다.

그리고 대입 준비 과정(GCE A-level 과정, 12~13학년)은 의무 교육과정이 아니며 국정 교과 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령층의 과정은 교육부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어워딩 보디에 의해 통제된다.

학교들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어워딩 보디를 선택한다. 앞의 2장 ‘어워딩 보디’에서 서술했듯이, 인문 과목의 학력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3개이며, 이들 모두가 12~15개 과목의 시험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들의 시험은 실시 기관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다름)가 있다. 예를 들면 외국어 과목의 경우, Edexcel은 회화에 무게를 두는가 하면, OCR은 문법이나 독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필기 시험과 프로젝트 사이의 비율이 어워딩 보디에 따라 다르다. 역사와 같은 과목에서 어떤 기관은 1회의 필기 시험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은 학생 개인이 리서치를 하여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필기시험과 프로젝트 사이의 비율은 어워딩 보디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학과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어워딩 보디들이 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라 학교는 제각기 가지고 있는 학교의 장점에 맞추어 어워딩 보디를 선택한다. 따라서 하나의 학교에서 영어는 OCR 시험, 수학은 Edexcel 시험, 과학은 AQA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학교는 개별 학생의 선호에 따라서, 한 개 과목

이러한 평가-감사는
전국의 모든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평가단이 방문하여 실시하며
이 방문 기간 동안 수업을 관찰하기도 하고
교사들의 학습 지도 계획서를 보고 그 안에 국정 교과 과정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에서 복수의 어워딩 보디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 개의 학교에서 Edexcel 영어 코스, AQA 영어 코스, OCR 영어 코스와 같이 세 개의 영어 코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학교가 어워딩 보디를 선택하면, 학교의 교재는 그 어워딩 보디가 발행한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물론 그 어워딩 보디가 출판한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

V. 확인과 통제

국정 교과 과정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 학습되고 있는지,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을 통제하는 형태는 크게 '직접 통제'와 '간접 통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통제'라고 하는 것은 OFSTED(Office for Standard of Education, 교육 표준청)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기관 감사평가원에 의해 전국의 학교들이 평가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평가-감사는 전국의 모든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평가단이 방문하여 실시하며, 이 방문 기간 동안 수업을 관찰하기도 하고 교사들의 학습 지도 계획서를 보고 그 안에 국정 교과 과정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평가-감사의 결과는 약 10쪽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교육부, 지역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각각 한 부씩 제출되고, 인터넷상에서 공개

되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하다.

수업에서 국정 교과 과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교사의 수업 준비가 부실하여 국정 교과 과정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그 상황은 감사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피드백'이 된다. 이 피드백은 시정 권고를 하지만, 시정 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간접 통제'의 수단으로서, 시험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 어떤 교재를 선택하든, 무엇을 가르치든, 이런 것들은 교사의 재량권에 맡겨 둔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실시하여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게 된다면, 교사는 시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교사의 재량권도 시험의 범위 안에 묶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특기할 부분은 영국에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면 학부모는 간단하게 아이를 전학시킬 수 있다.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 측(받아 주는 학교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지역 교육청, 전출하는 학교에서 전학을 규제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인기가 좋은 학교는 모든 학부모들이 아이를 전학시키고자 하기에 대기자 명단이 길어지고, 학교가 입학생이나 전학생을 '선별'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학생이 전학을 하면, 학생 한 명 당 전국 평균 연간 약 700만 원의 예산이 아이를 따라 전학한 학교로 지급된다. 따라서 하나의 학교에서 열 명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이 학교는 연간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 즉 학교의 성적이 공개되고, 학부

모의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 있고, 학교 예산이 학생을 따라 지급된다는 것은 학교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것이며, 학교의 성적은 학생 수, 학교 예산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재 선택이나 수업의 디자인에 관해 학교에 모든 재량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험과 예산을 통제하면 학교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다지 넓다고 할 수 없다.

Ⅶ. 교과서와 수업 디자인

영국의 ‘국정 교과 과정’은 한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흡사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추가로’ 교과서라는 것이 공급되고 있고, 그 교과서에 사용 의무가 지워져 있다.

이 교과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해설집’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재 중의 ‘주된 교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국의 교재와 다른 점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한국형 교과서는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그다지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세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을 많이 덜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영국 교사의 경우, 국정 교과 과정은 가르쳐야 될 ‘주제’만을 ‘던져 준’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이 든다. 이것을 20만 교사들이 모두 매일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교사 인력의 낭비라는 관점도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교과서의 내용이 명시적일 경우, 교사의 질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영국처럼 ‘주제’만 던져줬을 경우, 교사의 능력이나 질에 따라 아이들이 학습하는 분량의 편차가 아주 커진다. 이 두 번째의 경우, 교사들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규격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본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한국형 교과서의 단점으로는 그 내용이 ‘확정적이고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아이들이 지식을 이해하고 내재화하기보다는, 이미 명시된 답을 ‘외우는’ 주입식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지식은 새로운 세대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재해석되고, 재창출되어야 된다는 명제에서 본다면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교과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국정이 아닌 검정의 경우) 교과서가 몇 종류에 이르고, 학교에 따라 다른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 그리고 만약 교사가 전국 공통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교과서에 의존할 경우, 만약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국정 교과 과정이 ‘주제’만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다른 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전학을 가도 학습하는 주제는 다름이 없다. 하지만, ‘교과서’에 의존해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이전의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중복해서 학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누락되는 내용도 생길 수 있다.(필자 연락처: chio@brcu.com) 

교육 강국 핀란드의 성공 비결¹⁾

글 |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I. 핀란드의 교육 이념

PISA 3개 주기 동안 변함없이 읽기, 수학, 과학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올린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전 세계의 교육 정책 결정자와 교육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이런 해외로부터의 질문 공세를 대비하여 핀란드 정부는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이라는 소개 책자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책자의 서두에서 핀란드 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별, 계층별, 인종이나 종교별, 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체제의 구축이 핀란드 교육의 목표이자 성공 비결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대개는 너무나 평범해서 별다른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핀란드의 교육 실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실천 노력이 얼마나 진지하고 철저한지 알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대신 아동 누구나 소중한 인적 자원이며, 적절한 교육의 도움이 있으면 누구나 최고의 인재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이 출발한다. 아이들을 조기에 성적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남을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핀란드식 교육 철학은 핀란드 미래위원회의 마리아 타

우라(Maria Taura)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영재 교육(the gifted education)은 없습니다. 핀란드 청소년 모두가 영재이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영재 교육은 영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핀란드 국민 누구나 훌륭한 자원입니다. 아주 똑똑한 천재를 키우는 것보다 뒤쳐진 어린이들을 함께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고 원칙입니다.” (사이언스 타임즈, 2007. 12. 7.)

II. 핀란드 교육의 성공 기반 : 함께 모여 서로 다르게 공부하기

핀란드는 1970년대 초반까지 독일식 학제를 따라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초등 4학년 이후 중학교 진학 경로를 구분해 왔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 무렵, 조기 선별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손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합형 중등 교육 모델을 채택하기로 의회에서 결의하여 197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동안 종합 학교(comprehensive school)를 통해 의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 마지막 학년이 PISA에 참여(각국의 만 15세)하고 있으므로 핀란드의 높은 교육 성취도는 종합 학교 교육의 성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준화 제도와 유사한 종합 학교가 세계 최고의 성과를 생산해 낸 성공 비결

은 무엇일까? PISA 2주기(수학) 평가 결과가 발표된 2004년 늦가을, 영국의 BBC 방송이 핀란드의 교육부 장관과 인터뷰하면서 핀란드 중등 교육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그때 장관은 종합 학교의 ‘이질적 학생 구성과 이에 걸맞는 수업 지도’를 힘주어 말하였다. 즉, 종합 학교는 서로 다른 수준과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학생들로 이루어지므로 각기 다른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된 교수 학습을 잘 제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BBC 인터넷판, 2002. 11. 24.)

(1) 개별화 교육에 필요한 학급 규모

2004년 기준 핀란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2.7명, 중학교(종합 학교 후반부)는 10명, 고등학교는 16.2명으로 우리나라(20.8, 20.4, 16.9)에 비해 단연 앞선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교육 지표 2006)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 14.8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2.7명인 점에 비춰 보아도 핀란드 중학교의 교사 학생 비율이 특히 양호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각기 다른 수업 구성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6년은 담임 교사의 책임 하에 수업 및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고 모든 학생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운다. 그다음 중학교에서는 공통 교육과정과 일부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교과 담당 교사로부터 배우게 된다. 그런데 중학생 나이에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학급 사이즈를 줄여 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핀란드의 중학교는 우리나라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인차를 돌보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핀란드의 고등학교는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 대신 2000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무학년, 과정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큰 학급 규모로도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지해도 교육의 질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보여 준다.

(2) 수준 높은 교원의 확보와 유지

핀란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우수하고 유능한 교사를 가진 나라이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직 희망자는 평균 10:1 정도의 높은 경쟁을 거쳐서 교사 양성 과정에 선발된다. 교원 양성 과정의 입학 전형에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외에도 각 대학이 주관하는 교직 적성 테스트 등이 활용된다.

초등과 중등 모두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특히 전공 과목의 지식을 전달하는 일보다 교수 학습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이론화할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에게 지식의 전수자가 아닌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핀란드 교원 양성 과정의 특별한 강점으로 평가된다. 필자가 방문했던 탐페레 지역의 교원 양성 기관 부속 고등 학교의 교감에 따르면, 교원 양성 과정에 주기적으로 교생 실습을 나가서 수업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고 적절한 처치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핀란드의 교사 양성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동료 교사와의 협력이다. 핀란드 학교를 방문해 보면 신기할 만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수업을 참관하는 것에 교사들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교수 학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협의는 물론, 수업 및 학생 지도에 관한 협력도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런 개방적 자세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교원 양성은 대학(11개)의 교육 학부와 일반 전공 학과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중등 교과 교사의 전공 준비는 일반 학과에서 책임

핀란드의 학교는

정규 학급 담임 교사나 과목 교사 외에

학교 카운슬러와 학생 심리 전문가, 특수 교사 등을 일정 수 배치하고 있다.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과정 중에

교육 학부의 교수법 과정을 주 전공의 한 부분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따로 모듈로서 이수하고, 학생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고 교사로서의 능력 개발은 교육학부에서 책임 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비사범계 교직 과정 교육 과 유사하다. 교육 학부는 유치원 교사, 학급 담임 교사(초등), 특수 교육 교사, 상담 교사(counselor), 가정 및 기술 교사와 음악 교사 중 일부의 훈련을 맡는다. 최근에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자 영어 담당 교사 훈련 과정, 성인 교육 담당 과정, 언론 매체와 의사소통 전문 과정, 기술 응용 중심의 학위 과정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핀란드의 학교는 정규 학급 담임 교사나 과목 교사 외에 학교 카운슬러와 학생 심리 전문가, 특수 교사 등을 일정 수 배치하고 있다.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 과정 중에 교육 학부의 교수법 과정을 주 전공의 한 부분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따로 모듈로서 이수하고, 학생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특수 교사 자격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특수 교수법을 주 전공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반 교수법을 주 전공이나 별도의 모듈로서 이수하고 특수 교육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우수한 예비 교원을 선발하여 질 높은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대신, 이들 교사들이 학생의 교수 학습 및 평가, 학교 경영에서 전문적 권위를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 교사들은 교과서의 선택에서 거의 독점적 권위를 가지며, 다른 OECD 국가의 교사들에 비해 수업 내용의 결정, 학생 평가, 학교 단위 교육과정의 결정, 학교 예산의 편성 등에서 많은 발언권을 가진다. 특히, 교과서 및 보조 교재에 대한 정부의 검인정 제도가 1993년에 폐지되면서 교사와 학교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며, 학급을 구성하고 일과표(시간표)를 만드는 일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많은 핀란드에서 교직원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배경으로 핀란드 교사들의 보수 체계도 한몫을 한다. 초등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급 담당 교사(담임)와는 달리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과목 교사들의 월급은 그들의 수업 시수와 연계된다. 정규 교사들이 맡아야 할 최대 수업 시수는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되,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 및 교사의 경우 새로운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만큼 수당을 더 받으며, 기준 시간에 미달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장과의 계약하에 다른 일을 추가로 맡거나 이웃 학교의 수업을 추가로 맡아서 기준 시수를 채울 수 있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 활용의 융통성

핀란드에는 현재 학령 전 유아 교육, 9년제 기초 교육(종합 학교), 상급 중등교육(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ore Curriculum)이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정은 대체로 10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 교육과정은 각 과목 별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교수 방법상의 시행, 학습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특수 교육을 요하는 학생의 지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지도, 달성해야 할 핵심 내용과 학습 목표, 학생 평가, 특별한 교육적 과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도 등에 대해 안내해 왔

다. 이러한 개별 교과 단위의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최근에는 통합 교과적 주제, 특히 인간적 성장, 문화적 정체성과 국제주의, 의사소통 능력, 참여적 시민 의식,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을 위한 책임, 안전 의식, 기술 공학과 개인 등의 주제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위한 적절한 지원, 특수 교육의 요구에 대한 부응, 학생 상담, 학생의 복지와 안전한 생활 환경 확보, 수학 및 과학(기술)의 강조, 읽기와 문해 능력, 적극적인 시민 의식과 기업가 정신, 교수 학습 과정에서 ICT의 적극적 활용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종합 학교의 한 교실에 섞여 있는 이질적인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교과서 구성에서도 학생의 개인차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교육적 필요에서 종합 학교의 교과서에는 주제별 연습 문제가 세 가지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빨강, 파랑, 초록색으로 표시된 문제는 그 단원에서 학생들이 익혀야 할 서로 다른 수준의 과제를 반영하고 있다. 가령 초록색 문제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면, 빨간색 문제는 낮은 수준의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색깔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령 수학에서 계속하여 초록색 문제를 풀 정도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라면 학기 말 성적 평가에서 최상급인 9~10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빨강과 파랑 사이를 주로 풀었던 학생이라면 5~6등급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4등급 밑으로 남게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담당 교사는 그 학생을 위한 특별 지도나 특수 교육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하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 주고, 부진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그것도 조기에 개입하여 일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누구도 부진아로 남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핀란드 수월성 교육의 요체이다.

핀란드에서 평가를 위한 일제 고사는 매우 보기 어렵다. 학생의 평가는 주로 수업 중에 생산된 학생의 과제 수행(class work), 프로젝트, 교사가 실시한 시험과 포트폴리오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수업 활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학년 말에 종합적인 평가 기록을 작성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는 시험 점수나 석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처럼 교사 개인의 정성적, 종합적 평가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므로 교수 학습의 질 유지를 위해 교사들의 평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그만큼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학습자의 특성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한다.

중학생이 되면 과목별로 평가 결과가 기록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제 고사보다는 담임 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가 꾸준히 관찰, 평가한 결과가 비중 있게 활용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수도 있지만 단 한 차례 시험 결과만으로 학생의 성적을 생산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핀란드 학교에서 시행하는 평가는 교육적 목적의 형성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가 일차적 관심이지 상호 비교를 위한 상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선발 등의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중학교부터는 과목별로 4~10등급이 부여되는데, 4등급 아래는 탈락을 의미한다.

종합 학교 교육이 통합 교육의 기초 위에 개별화 교육을 수행한다면, 고등학교는 학생의 학교 선택 및 학교 내 교육과정 선택권을 최대한 확대하여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와 수준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영재 교육 없이도 핀란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무학년 과목 선택 제도 덕분이다. 개개인의 수준을 반영하기 힘든 공통 교육과정을 학년 단위로 배분하게 되면 여간 노력을

개인별 학습 계획은 학년이 끝날 무렵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성취도나 흥미에 따라 다음 해 재조정될 수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 교사 등이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 이수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기울여도 학생들의 개인차에 부응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핀란드에서는 2000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년 개념을 없앴다. 대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입학하면 개인별 학습 계획(individual study plan 또는 course tray)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성취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개인별 학습 계획은 학년이 끝날 무렵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의 성취도나 흥미에 따라 다음 해 재조정될 수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와 상담 교사 등이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와 능력에 따라 고등학교 이수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 중에는 2년 만에 75개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일찍 졸업을 하고 있으며(1% 정도), 졸업(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 특정 과목의 성적이 과락에 해당되거나 자신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학교를 1년 더 다니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다.

(4) 학생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교 복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핀란드의 학교에서는 차별 없는 학습 복지의 제공을 강조한다. 학습자 복지는 따돌림이나 폭력과 같은 정서적, 사회적 문제는 물론, 신체적 건강의 문제와 적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 도달 등 학습자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핀란드의 종합 학교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육 복지사와 학교 심리학자, 상담 전문가와 특수 교사 등이

종합적인 복지 지원팀을 이루고 있다. 이때 특수 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에겐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진행 정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단위 학교 복지팀은 지역 교육청을 매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발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대처하고 있다.

핀란드 학생들은 교육법에 따라 누구나 특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법적 장치에 힘입어 종합 학교 학생들 중에서 약 6.2%는 전일제로 특수 교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 정도는 부분적으로 특수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특수 교육의 수혜자가 이처럼 많은 것은 특별히 핀란드 아동들에게 학습상의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특수 교육의 범위가 그만큼 넓고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 교육은 종합 학교 학력 이전인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적용되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조기 개입을 통해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학습 능력을 개선, 일반 학급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학습 장애의 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면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도 종합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배우도록 배려받고 있다. 일반 학급에 특수 교사가 함께 배치되어 학습을 돕거나 일주일에 2~3차례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별도로 가르치는 방식이 병행된다. 일반 학급이 20명 정도의 학급 규모라면 특수 학급에는 10명 정도 소규모 학생 배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식 학교 복지의 주요 타깃 그룹은 학습 부진 학생과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누적,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학습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한 보정 교육(remedial teaching)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령 영어 읽기 학습에서 l과 r의 발음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언어 지도 전문의 특수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학교마다 배치된 특수 교사는 개별 학생들의 특수 교육 수요를 파악, 개인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따로 또 같이’ 보충 지도하고 있다. 가령 특정 학생이 읽기의 부진 정도는 심하지만 수학은 덜 한 경우, 읽기는 별도의 반으로 분리해서 지도하고 수학은 통합하여 가르치되 옆에서 보조 교사가 따라 붙어서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사소한 학습 결함과 부진에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맞춤형 보충 지도를 아끼지 않는 학습 복지제도는 핀란드 학생들이 PISA에서 중상위층은 다른 나라보다 두터우면서 하위 수준은 가장 적은 교육 선진국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5) 현장 밀착형 교육 개선 시책의 추진

핀란드 학생들이 PISA 3주기 내내 수학과 과학에서 아주 좋은 성취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수학 과학 장려 정책(LUMA)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2004). LUMA는 핀란드어로 ‘과학과 수학’을 줄인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8~2002년까지 지속된 과학 교육 개선 시책이었다. 이 시책은 중앙 정부 대신 각 지자체들이 이 시책에 참여한 학교에 일정 기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지금은 이 프로그램에 따로 재정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일선 학교 중에는 지금도 그때의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 지속시키고 있다.

이 시책에 참여한 학교는 자체적으로 과학 교육 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만들어 추진하였는

데, 과학 실험 환경의 개선 및 실험 활동 강화, 여학생의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과 적성 발굴 및 장려, 고급 수학 과학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 개별 학교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참여 학교 및 지자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LUMA에 참여한 학교의 학생들은 고급 수학과 과학을 이수한 비율에서 일반 학교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고급 수준의 과목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과학과 수학에서 상위권 학생이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Ⅲ. 핀란드 교육의 시사점

먼저, 핀란드의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분명한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일부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이끄는 포용적 수월성이 국가 경쟁력의 토대라는 사실을 핀란드 지도자와 국민 대다수는 인정하고 있다. 물론, 핀란드에서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최상위권 중심의 영재 교육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집단의 선부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학습 가능성을 지닌 개별적 존재라는 교육적 합의를 토대로 누구도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는 기회 균등의 철학이야말로 핀란드가 거둔 탁월한 성취의 정신적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교육의 개혁을 추진할 때에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과 동원 가능한 자원의 수준, 교육계의 교육적 인식과 문화 등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투자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1960년대 중반에 교육의 트랙제 폐

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약 10년의 준비와 실험을 거쳐 새로운 제도의 출범시켰으며, 종합 학교 제도 도입 이후에도 끊임없이 실태를 분석하고 더 나은 실천과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개혁을 정례화해 왔다. 특히, 이질적인 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학급 규모를 대폭 줄이는 데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으며, 중학교의 학급 규모 및 교사 학생 비율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건 개선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하향 평준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 단계인 중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 개별화 교육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핀란드 종합 학교의 최고 강점은 특수 교육을 모든 학생의 권리로 확대,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특수 교육하면 특별한 심신의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예외적인 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핀란드에서 특수 교육이 모든 사람의 자기 계발을 위한 보편적 권리임을 부각시켜 특정 분야에서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학생이 가까이 특수 교육의 서비스를 요청하도록 개방해 왔다. 그런 점에서 단위 학교의 책임 아래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학습 부진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교육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단위 학교가 학생들의 특성과 학교 안팎의 조건에 맞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 활용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핀란드는 양질의 교육이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 석사 학위를 기본으로 하고 교사 양성 과정(대학) 입학 단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을 유인, 높은 자부심과 전문가적 책무성 및 헌신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체험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다시 교직을 선택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야말로 핀란드 교육의 큰 밑천이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

구자로서의 자질과 활동이 강조된다.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라는 활동 자체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로서의 마인드는 핀란드 교사들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부심과 긍지, 헌신성 넘치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나아가 핀란드 교사는 혼자 고립된 교육을 하지 않고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 및 상호 장학을 통해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승진 점수 확보를 위한 형식적 연수보다 현장 중심의 자기 연수와 상호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연**

-
- 1)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현안 보고 자료 OR 2007-3-8호(제목: 핀란드의 공교육 개혁과 종합 학교 운영 실제)의 내용을 토대로, 최근의 방문 면담 결과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한국의 교과서 제도와 그 개선 방향

글 | **김용한**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오 늘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세계 각국은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교육의 핵심은 역시 학교 교육에 있으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발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검정하는 과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교과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사회 문화적 변화의 반영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이에 현행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 및 최근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한국의 교과서 제도

일반적으로 교과서 제도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는 각각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마다 문화적 배경과 사회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같은 검정제나 인정제도 그 운영 방식에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국정제의 비중이 높았으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점진적으로 검정제와 인정제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다.

(1) 교과서 제도의 법적 근거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통해 국가가 공교육의 수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2004. 6. 19. 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정의)에서 ‘교과용 도서’라고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하고 ‘교과서’라고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도서’라고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아울러 ‘국정 도서’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검정 도서’라고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하며, ‘인정 도서’라고 함은 국정 도

서 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교과용 도서 발행 제도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병행하고 있다. 각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정제

국정제는 국가 또는 주에서 직접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발행제(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라고도 한다. 교과서 개발 절차는 통상 저작→심의→발행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며, 교과서로서의 승인자와 채택자 모두 교과서 발행자인 국가 또는 주가 된다. 교과서 채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교과서 저작의 근거인 ‘교과서 기준’이 곧 채택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정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정 도서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와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 교과와 일부 교과용 도서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를 통해 연구 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개발을 위임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에서는 국정 도서가 대폭 검정으로 전환되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 도서였던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및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3~6학년) 및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과용 도서 등이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② 검정제

검정제(textbook authorization system)는 민간이 먼저 교과용 도서를 제작한 후에 권위를 가진 기관에 심사를 받고 적절한 기준에 합격하여 통과되면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간이 먼저 제작한다는 점은 인정제와 동일하나 검정제 교과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서만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얻어 발행된다는 점이 인정제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검정 교과용 도서 저작의 주체는 민간(저작자 또는 출판사)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정 교과용 도서와는 다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정 심사를 받아야 교과용 도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교과서 발행에 영향을 끼친다. 검정 도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또는 주의 교육과정과 검정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검정 기준 발표→저작(민간)→검정→발행의 절차를 거쳐 교과용 도서가 발행되며 교과서로서의 검정 승인자는 검정기관인 국가 또는 주 등이다. 교과서의 채택자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이 되는데, 학교의 경우에 교사가 선정하여 교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학교의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역 교육청의 경우 시 군 또는 시 도의 교육위원회가 채택권을 가진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검정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독일 등이다.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제32조(기능)에서 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정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에서 교과용 도서를 채택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③ 인정제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나 국가의 교육부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후에 목록을 정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교과서의 발행자는 민간(또는 저작자)이며, 교과서는 저작 후 발행되어 해당 국가나 주, 교육구의 교과서로 '인정'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작→발행→인정의 절차로 교과서가 발행되며, 승인자는 국가, 주 또는 학교의 교과서 인정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정 도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정제와는 달리 국정 도서나 검정 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인정제는 검정제와 유사한 제도로 인정 심사는 검정 심사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인정 업무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④ 자유 발행제

자유 발행제는 일반 도서의 출판 원칙을 교과서 발행에도 적용하여 국가가 교과서의 저작, 발행, 채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자유 발행제에서 교과서의 저작자는 민간(출판사 또는 저작자)이며, 교과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또는 주의 교육과정과 저작자의 학문적, 교육적 필요이다. 교과서는 저작 후 심의, 검정 절차 없이 발행되며, 발행 후에도 교과서로서의 특별한 인정 절차 없이 교사들에 의해 교과서로 인정 채택된다.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출판사별 교과서 목록과 선택자들의 자유 의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용 도서 자유 발행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 자유 발행제 하에서도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는 그 근거로서 교육과정을 참고한다는 점은 인정제와 같으나 인정제는 해당 국가나 주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책으

로 인정한 교과서를 채택하는 제도인 반면, 자유 발행제는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을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영국의 경우가 전통적으로 자유 발행제를 유지해 온 나라이다.

앞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는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국정제는 교과용 도서가 단일화되는 반면 국민 공통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위한 공통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검·인정제는 민간에 의해 어느 정도 다양한 교과용 도서 발행이 가능한 반면 국가나 주의 간접적인 간섭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자유 발행제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 도서가 제작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 공통의 기본 소양 교육의 공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자들의 책무성과 교육과정의 목표나 성취 기준에 근거한 별도의 평가 제도 정착 등이 필요하다.

II.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

교과용 도서는 가장 중요한 수업 교재이다. 이는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목적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각 교과목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의 의미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교육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과서의 이러한 배경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제기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정책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들을 일시에 수용할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다음은 그동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교육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과서의 이러한 배경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제기되는 요인이 된다.

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1) 교과서 외형 체제 개선

① 외형 체제 개선

2006년 3월에 발표한 ‘질 높은 교과서 발행을 위한 외형 체제 개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출판 기술의 발전으로 시중에 출판되는 일반 도서의 외형 체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교과서는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종전의 외형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외형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창의력과 개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외형 체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은, 첫째 교과서 발행 관계자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화 및 다양화 추진, 둘째 교과별 특성과 교수 학습 효과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 셋째 가독성, 조형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편집 디자인의 획기적 개선, 넷째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교과서의 외형 체제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개선 등이다.

개선 방안은 교과서 외형 체제는 판형, 지질, 색도, 서체, 쪽수, 편집 배열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편집 디자인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연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종합,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교과서 외형 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언론의 우려 제기도 있었고, 시험 생산 결과 교과서 가격 인상폭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안의 일부를 보완하였다.

② 과학 교과서 외형 체제 자율화

2006년 10월, 국정 과제 수행 차원에서 이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모델의 과학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면서, 과학 교과서에 한하여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판형, 쪽수 등 기존의 외형 체제 기준을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율화 방침은 2006년 10월 이후 검정에 적용하되, 향후 새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 시에도 과학 교과서에 한하여 외형 체제 자율화 방침을 적용토록 하였다.

(2) 교과서 제도 개선

2007년 6월에 발표한 ‘양질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첫째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을 반영하는 교과서 개발, 둘째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질이 향상되는 교과서 개발, 셋째 학생의 흥미와 수준, 진로, 탐색을 중시하는 교과서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① 국정 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제도 개선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정

도서의 검정 확대를 들 수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중등학교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에서 국어, 도덕, 역사(중 1~고 1) 또한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또, 선택 과목 중 검정 출원이 가능한 과목인 중학교의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및 고등학교 아랍어를 제외한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중 기계 제도, 정보 기술 기초, 기업과 경영 등이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정 도서의 검정 전환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변화 및 학문의 발전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검정 방식의 개선

검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검정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에 대해 교과서 검정 주기와 관계없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교과용 도서 사용 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그 사용 연한이 경과되면 검정을 실시하는 주기적 검정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검정 출원 매체를 다양화하였다.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검정 기준을 개발 보완 고시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연구를 거쳐,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과서와 지도서 등 검정 출원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교과용 도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검정 기준 및 판정 원칙을 재조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교과서 출현을 촉진 지원하도록 검정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개선하고 A/B/C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 심사 관점에 따

른 기계적 적 부 판정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으로 질 높고 창의성이 높은 검정 도서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판정 유예제를 도입하였다. 검정 1차 본심사에서 적 부 판정 이외에 ‘판정 유예제’를 도입한 것은 검정 1차 본심사에서 적 부를 판단하거나 판정을 유예하여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판정에 이르도록 하고 ‘판정 유예’로 결정된 경우에는 ‘수정 보완’ 후, 2차 본심사에서 최종 판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판정 유예제를 도입하여 수정 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함이었다.

③ 인정 도서 확대

인정 도서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검정 도서에 상응하는 심의 기준, 채택 기준, 사후 수정 보완 체제 등을 마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는 등 인정 도서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인정 도서와 관련된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 및 전담 인력 배치 권고를 통해 인정 도서의 질 제고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정 도서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도 확대하였다. 이는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에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 사용을 확대하고, 자율 학교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 이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④ 교과용 도서 질 관리 강화

교과용 도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서비스(<http://cutis.moe.go.kr>)를 활성화하고 출판사의 자체 ‘교과서 오류 접수 센터(가칭)’ 설치 권고 및 집필자와 출판사에게 오류 등에 대한 공동 책임 부과, 교과서에 ‘교과서 오류 신고 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

으로 표시토록 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 출판사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수정을 요구하여 차년도 발행 도서에 반영하고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에 따른 교과서 수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과용 도서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정 도서는 개발 단계에서, 검정 도서는 검정 단계에서 전문 기관의 자문을 필요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에 대한 표현 표기의 오류 검증 및 교과서의 편향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는, 첫째, 질 높은 교과용 도서 보급으로 학생의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제고 지원, 둘째, 복수의 검정 기회 및 발행사와 저자의 책임 있는 수정 보완을 통해 교과서의 질 개선 촉진, 셋째, 검정 기준과 규제 완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넷째, 검정 절차를 개선하여 교과서 검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다섯째, 규제 완화를 통한 교과서 출판사와 출판 시장 관행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Ⅲ. 맺는 말

교과용 도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보급 사용이다. 즉,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 도서 편찬에 있으며 그 기본 방향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개발이다. 또, 이를 구체화하면, 첫째,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용 도서, 둘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 도서, 셋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 개

발이다.

우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는 관계자들의 높은 책무성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교과서 개발자 간의 협력도 긴요하다. 즉, 국가는 개발자들을 신뢰하고, 개발자들은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정부의 요구에 부응할 때 교과서 제도 개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연**

참고 문헌

- 김만곤(2006), 검정 도서 수정 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재복(2006),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서지영(2007), 미국의 교과용 도서 정책과 질 관리 체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용숙(2002), 교과서 내용 구성 및 체제 개선의 방향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설 열린교육연구소.
- 조난심(2005), 교과서 편찬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강 외(2006), 교과서 편찬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금성출판사.
- 홍영란(2006),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2004), 교육과정 교과서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 과제.

초등학교 경제 교육의 통합적 접근



글 | 문중국
서울한산초등학교 교감

1. 초등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

우리의 일상생활은 경제 활동의 연속으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더 한층 대두되고 있다.

초등학생은 주로 소비자의 위치에 있으나, 시대에 따라서 경제 활동 모습이 다르듯이 이에 따른 아동 소비자의 모습도 변화해 왔다. 그동안 초등학생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 수준의 향상은 아동의 자유재량 소비액을 증가시켜 초등학생들도 독립된 소비 주체로, 그 역할이 부각되었다. 또한 아동기의 소비 습관은 장차 성인이 되어서의 소비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올바른 경제 교육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가치관과 행동 양식의 기본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경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가 단장으로 있는 서울초등사회 수업지원단에서 단위 워크숍 과정을 거쳐 시범 수업한 통합적 접근 방법의 경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경제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 방안

경제 교육은 경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탐구와 가치 탐구를 거쳐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경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학문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다양한 자료에서 경제 교육의 자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인 벽을 넘어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

경제 활동은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 개념은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지도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경제 교육에서 다른 영역과의 통합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단원에 대한 재구성 방안 연구와 적절한 사례 개발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생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 수준의 향상은
아동의 자유재량 소비액을 증가시켜 초등학생들도 독립된 소비 주체로,
그 역할이 부각되었다. 또한 아동기의 소비 습관은
장차 성인이 되어서의 소비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올바른 경제 교육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1) 분석적 접근 방법과 규범적 접근 방법의 병행

실증 경제학은 경제 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하며 경제 현상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 관계를 발견하고 체계화하는 일련의 지식 체계이다. 실증 경제학에서 쓰는 분석적 연구는 일정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특히 변수 상호 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 자료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다.

규범적 경제학은 가치 판단에 따라 어떤 경제 상태는 바람직하고 어떤 경제 상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지식 체계이다. 규범 경제학은 행동 규범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므로 가치 판단을 요구하며, 경제 목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경제 목표 사이의 조화와 갈등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를 모두 일정하거나 같다고 가정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경제 이론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이념적, 이상적 특정한 환경에서만 옳다. 따라서 실증 경제학적 방법과 규범 경제학적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2) 경제 교육의 통합적 접근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은 조직 형태상 통합의 정신이 잘 구현되었지만, 경제 개념의 내용 구성 면에서 보면 통합의 적용이 미흡하였다. 예를 들면, 경제와 지리는 ‘공간적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연계성이 있으며, 경제와 역사는 ‘변화’라는 개념으로 연계성을 지닌다. 경제 교육에서 다른 영역과의 통합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단원에 대한 재구성 방안 연구와 적절한 사례 개발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① 경제 교육의 지리적 접근

지리는 인간 경험의 공간으로서의 지구, 지표, 장소, 경관, 환경, 위치 등의 생활공간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 신도시 개발, 간척지 개발처럼 인간과 자연 환경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원시적인 공간이 경제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지역은 새로운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의 여러 기능의 입지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 소득과 자금의 순환을 가져다주게 된다. 조선 후기 국제 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의주에서의 중국과의 무역, 부산을 무역항으로 한 일본과의 교역을 들 수 있다. 즉, 의주와 부산 동래가 무역의 중심지가 된 이유를 지리적인 요인임을 알아내도록 탐구하고, 심화 활동으로 오늘날 한 중 일의 무역 관계와 무역의 중심지는 어떻게 변했는지 학습함으로써 경제 개념인 국제 무역을 이해하도록 한다.

② 경제 교육의 역사적 접근

역사의 계속성과 변화의 과거 사실에 대한 설명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경제생활과 연계되며,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적인 사건이나 사례는 현재와 대비되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고, 과거의 유사한 경제적 상황을 학습함으로써 현재의 경제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역왕 장보고에 대한 내용이나 조선 후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경제 개념의 사례로 활용한다면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경제 학습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경제나 역사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③ 경제 교육의 정치적 접근

경제 교육의 정치적 접근은 정치와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 등을 통해서 그 가치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현대에 와서 정치적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제 무역’이라는 경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 보복의 문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등도 경제 교육의 정치적 접근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④ 경제 교육의 문화적 접근

당시의 경제 사회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조선 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상업이 천시되어 화폐의 유통은 고려 시대보다 위축되었고, 쌀과 배 등 물품 화폐가 다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경제와 학문적인 그 시대의 문화와 연계하여 기본 학습을 실시하고, 심화 학습에서는 오늘날의 화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상상해 봄으로써 경제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된다.

3. 경제 개념 이해를 위한 수업 재구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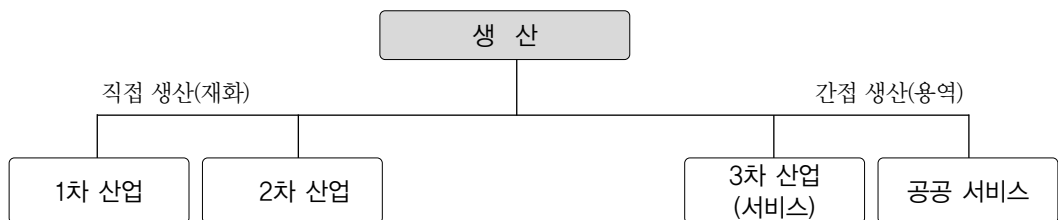
(1) 경제 단원의 효과적인 수업 전략

- 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 가는 경제 수업의 재구성
- ② 경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③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배양

(2) 경제 단원 학습의 설계

① 개념 제시 단계(1~2차시)

본 활동에서는 1차시에 제시했던 ‘생산의 개념도’를 참고로 하여, 단계별로 생산의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생산의 개념 이해를 위해 【그림 1】처럼 교실 게시판에 생산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1】 생산의 개념도

② 개념 이해 단계 (3~5차시)

- ㉦ 산업의 3부분 카드: 개념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 정의 카드, 그림 카드, 설명 카드로 이루어진 3부분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림 2】 산업의 3부분 카드

- ㉧ 우리 기업의 대륙별 해외 진출 지도 제시: 해외로 진출한 나라와 수도를 3부분 카드를 통해 익히게 하였다. 추후 활동으로 각 나라에 대한 문화나 지리적인 환경도 조사해 보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지도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3】 우리 기업이 진출한 나라들

사회과 부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도나 백지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무역 현실을 이해하게 한 후, 대륙별로 해외로 진출한 나라들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하였으며, 또한 흥미와 동기 유발을 하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③ 개념 적용 단계(6~9차시)

지금까지 학습한 개념을 완전히 익히도록 하기 위해 정답 판을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정답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며, 학습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반복함으로써 경제 개념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경제 수수께끼 문제는 아동들의 해결 능력에 맞는 문제들로 구성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발견하고 이를 익혀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작하였다. 경제 수수께끼 문제는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문답식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④ 정리·보충·심화 단계(10~12차시)

그밖에 보충 심화 활동으로 개별화 교수 학습의 심화 활동으로 TV 뉴스와 신문에 나타난 경제 관련 기사 스크랩하기 및 NIE 경제 일기 쓰기, 각종 잡지에 등장하는 광고 및 사진 등을 통해서 자유와 경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색하여 ‘경제 신문 만들기’ 등의 활동적인 요소들을 수업 활동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보충 심화 활동으로 ‘나의 경제 일기 쓰기 NIE’, ‘경제 신문 만들기’, ‘경제 스크랩북’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개별화하여 실시한 후에 단원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4. 초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초등학교에서의 경제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교육 관련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 기관, 연구 기관, 행정 기관, 교육 행정 기관 등 각종 기관을 통하여 경제 교육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 교육은 활용을 전제로 되어야 한다. 경제 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ICT, NIE 등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생활 중심의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 관련 현장 체험과 경제 관련 행사의 참여 등 생활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이다. 알뜰 시장 경매 행사는 현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한다는 의도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가격 결정의 원리, 시장의 원리, 유통의 원리 등 경제 전반을 실천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경제 원리를 깨달아 가고 있다.

넷째, 외부 인사를 활용한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경제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의 설정,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 전체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고, 실제적인 경제 교육은 자원 봉사자들을 비롯해 전문 기관의 경제 교육 강사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참고 문헌

- 김정호(1997), 한국 경제의 문제와 경제 교육의 과제, 한국경제교육학회.
- 김종호(2004), 초등학교 경제 교육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초등경제연구소, 발표 자료.
- 문종국(2004), 사회과 교육과정과 지도 실제, 초1정 자격 연수 교재, 서울특별시 교원연수원.
- _____(2007), 초등 교과서 경제 부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정경제부, 발표 자료.
- 조현애(2005), 사회과 학습 지도의 실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연수 자료.
- 차경수(1993), 개념 학습과 고급 사고력 함양, 사회와 교육, 제17집.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의 쟁점¹⁾

글 | 반재천
충남대학교 교수



I. 문제 제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등급제는 2004년 10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이 안에 따르면 수능 등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을 유도하고, 수능의 비중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즉, 수능 등급제는 치열한 점수 위주의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등 다양한 전형 자료의 비중을 높여 가능성과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소외층 배려 등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2008학년도에 수능 등급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수능 등급제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고, 많은 사회적 논란 끝에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수능 등급제를 폐지하고 2007학년도 수능처럼 표준 점수도 함께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수능 등급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수능 등급제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수능 등급제는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을 유

도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되었다.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증명되어서 도입된 것은 아니다. 등급제로 지원자를 선발하더라도 기존 표준 점수에 의한 선발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합격생들이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경험적 정보에 근거하여 도입된 것은 더욱 아니다. 또한 등급으로 선발하더라도 선발 시험의 특성에 비추어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여 도입된 것도 아니다. 이론적 우월성 내지는 적합성보다는 참여 정부의 교육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었다(손종현, 2005). 수능 등급제 첫해인 2008학년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수능 등급제 논란의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능 등급제가 논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비일관적 점수 변환과 관련이 있다. 수능에서 등급은 여러 원점수를 동일한 등급으로 변환하는 다 대 일 변환 방식의 일종이다. 그런데 등급의 경우 점수의 분포 형태에 의해 점수대에 따라 다 대 일 변환 방식이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시험 점수가 쉬울 경우 두 개 정도의 점수가 한 등급으로 변환되고, 고르게 응시생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점수가 동일한 등급으로 변환된다. 점수 구분점이 적고, 편포 정도가 심할 때 다 대 일 변환의 등급 구분은 매우 비일관적이다. 즉, 어떤 등급에

서는 지나치게 적은 가짓수가 동일한 등급으로 변환되고, 어떤 등급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가짓수가 동일한 등급으로 변환된다. 달리 말하면, 어떤 등급에서는 조그마한 능력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반대로 어떤 등급에서는 커다란 능력 차이가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등급 경계선에 있는 응시생이 불과 1~2개 정답 차이로 다른 등급을 받는 것과 관련된다. 수능의 탐구 영역 내 과목의 문항 배점이 2 또는 3점임에 비추어 문항 하나의 정답 여부에 따라 등급이 갈릴 수 있다. 실제로 2007학년도 수능의 『국사』, 『법과 사회』 등의 과목이 그 예이다. 등급제가 이들 과목의 1등급에서는 점수를 지나치게 성급게 묶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과도하게 그야말로 ‘등급’을 가르는, 그래서 능력 차이가 매우 적을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등급제’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어디선가 반드시 등급 경계점이 있으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등급을 구분했기 때문에 등급 경계선 바로 아래에 있는 응시생이 느끼는 불만족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도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응시생이 생각하는 불합리성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응시생은 수능을 치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목을 준비해 왔고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다. 어떤 응시생은 최선을 다했는데 특정 영역에서 한 문항 정도 틀렸고, 이 수험생은 자신의 노력에 부응하는 정당한 정답 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 보자. 그런데 그 영역이 쉬워서 응시생에게 2등급이 통보되었다고 해 보자. 응시생은 최선을 다해서 문항을 풀었고 본인은 한 문항만 틀렸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험이 쉬워서 순전히 순위에 밀려서 등급이 내려갔다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쉬워진 것은 그 응시생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

다. 수능 출제진에 의해 생긴 문제이다. 본인의 부족으로 문제를 많이 틀렸다면 낮은 점수에도 합당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응시생이 정답 개수는 많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한 문항을 더 틀려서 등급이 내려간다면 이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원래 수능에서 선택 영역/과목제를 도입한 취지도 선택한 영역/과목에서 ‘내용’과 관련하여 우수한 능력을 보일 것을 기대하였고 응시생은 그에 부합하였다. 그런데 다른 ‘응시생’과 비교하여 점수가 결정되면 응시생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점수로 표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어떤 과목에서는 여러 개를 틀려도 같은 등급이 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응시생의 입장에서는 등급제에 의한 점수 산출 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유는 여러 과목의 원점수(또는 표준 점수) 총점은 높는데 수능 총점수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영역에 가중치를 주어 등급 점수를 반영하여 합산하면, 원점수의 단순 합과 순위가 같지는 않다. 이는 표준 점수를 써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영역을 등급화해서 수능 총점을 산출하면 원점수(또는 표준 점수)를 사용하여 수능 총점을 산출했을 때에 비해 점수의 왜곡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능 총점을 산출한다는 것은 일부 영역에서 부족해도 다른 영역에서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영역/과목에서 1 또는 2등급일 때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예컨대 2명의 응시생이 있는데 응시생 A가 3개 영역에서 원점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1등급이고 4번째 등급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하자. 응시생 B는 4개 등급에서 가까스로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등급을 이용하여 수능 총점을 산출할 경우 응시생 B의 점수가 더 높게 나

즉 고비용 저함량의 자료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총점 산출 시 정책적으로 이들 전형 요소들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각 요소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응시생 A는 이러한 점수 체제가 매우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Ⅲ. 개선 방향에 대하여

학생부의 영향력을 높이고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등급제가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고 본다. 학생부에 의한 선발로도 적격자 선발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력을 높인다고 먼저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학생부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이것을 활용해도 적격자 선발에 충분하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먼저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측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수능은 자체로서 신뢰도가 높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있다. 수능 등급제로 정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즉 고비용 저함량의 자료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접근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총점 산출 시 정책적으로 이들 전형 요소들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각 요소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서 다른 검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접근 방법보다는 다른 전형 요소의 양호도를 높여서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원점수, 표준 점수, 등급, 백분위, 지역별 수능 점수, 수능 기술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05학년도 수능에는 표준 점수가 주요 보고 점수였고,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등급이 주요 보고 점수였다. 표준 점수제이든 등급제이든 아무리 정책적 취지에 적합하다고 정책 당국이 주장하더라도 부모 및 응시생은 총점 산출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2002~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영역별 등급, 5개 영역 종합 등급이 응시생에게 제공되었었다. 원점수, 표준 점수, 등급, 백분위 모두를 제공하면 응시생은 총점 산출과 관련한 적절성에 대한 논쟁을 줄이고 자신의 점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시 대비에 매진할 것이며, 대학은 어떤 점수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연구하고 판단할 것이다.

2007학년도에도 표준 점수가 제공되었지만 많은 대학에서 이미 백분위나 대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써 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출제 당국은 또한 이들 정보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점수 체제’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고 오직 과목 간 난이도 조절 등 수능 자체의 양호도 제고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응시생이 올바른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응시생은 진학하고자 하는 지역에서의 수능 점수 분포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진학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수능에 대한 기술 보고서(technical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수능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수능 과목을 축소하거나 일부 과목을 필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 수능 체제 하에서는 선택 과목 간 난이도차에 따른 유 불리 및 수능 총점 산출 방법에 따른 공정성 시비 문제를 어떠한 점수 체제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시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표준 점수 및 등급 점수 체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컨대 표준 점수를 써도 여전히 선택 과목 간 최고점 조정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이들 과목을 필수로 하거나, 선택 과목제를 유지하되 대학 또는 모집 단위별로 몇 개 과목을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양길석, 이명애, 시기자, 민경석, 2007). 그러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 불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총점 산출이 가능하여 불공정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현 수능 체제에서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과목 간 응시 인원의 편중 현상이 심함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 과목제의 원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필수로 지정되지 않는 일부 과목의 경우 모집 단위의 사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면, 이들 과목을 여전히 입학 전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물리학과에서는 물리Ⅱ의 성적에 대해 응시생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반재천(2008)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임.

📖 참고 문헌

- 반재천(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에 대한 고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교육 정책 토론회(2008. 1. 24.).:한국 교육 평가 정책의 현안과 과제에서 발표.
- 손종현(2005), 2008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 방안.
- 박도순 외(2005), 교육혁신위원회 2년 활동 백서(pp. 242~292), 서울:사회교육문화사.
- 양길석 이명애 시기자 민경석(2007), 대학 입학 시험 점수 체제 국외 사례 연구, 교육과정 평가 연구, 10(2), pp. 145~172.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글 | 김경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는 학교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점검 체제를 마련한다.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준비된 국가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앙교육연구소의 ‘기초 학력 조사(고종렬 외, 1969)’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행동과학연구소의 ‘학교 교육의 전국적 평가 연구(권균 외, 1973)’, 한국교육개발원의 ‘새 교육 체제의 효과 검증을 위한 학력 평가(김형립 외, 1975)’,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이상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행했던 ‘전국 초 중 고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이 국가 단위에서 수행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평가 도구의 개발과 시행 과정, 분석 등의 절차가 정교하지 못하였고, 성취 수준의 변화 추이나 성취도와 배경 변인과의 관련성 분석, 성취도 분석 결과의 교육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여 학교 교육의 질 관리 체제의 하나로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고자 설립 원년인 1998년에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시행된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김명숙 외, 1998, 1999; 이명희 외, 2000, 2001; 최석진 외, 2002)’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정구향 외 2003, 2004; 이양락 외, 2005; 박정 외 2006; 조지민 외 2007)’는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 온 평가 체제라고 할 수 있다.¹⁾

이 글에서는 국가 교육의 질 관리 기제로서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개관하고 최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자료 공개와 전집 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을 몇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개관

평가원에서는 기존 학업 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에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김명숙 외, 1998)’를 수행하면서 주요 과목을 2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999년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와 수학의 예

비 검사를 시행하였다(김명숙 외, 1999). 당시 교육 성취도 평가는 기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기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2000년도부터 매년 2~3개 평가 영역을 2~3년 주기로 단계적 시행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2000년에는 당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를 1년마다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평가원에서는 평가 주기, 내용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00년에 사회와 수학의 본검사뿐만 아니라 예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국어, 과학, 영어도 본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이명희 외, 2000) 이를 기점으로 성취도 평가의 기본 설계는 변화되기 시작했다.

2001년에는 평가 대상과 내용에서 그 규모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그 명칭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로 변경하고²⁾ 시행 시기도 당해년 말인 11월로 조정하여 평가 대상의 하나인 고등학교 2학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종료되는 시점인 고 1로 변경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평가 대상을 모집단의 1%로, 2004~2005년에는 고 1에 한

하여 3%, 2006년에는 초 6, 중 3, 고 1 공히 3%, 2007년에는 고 1의 경우 5%로 표집 규모가 매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 설계는 교육 당국의 현성적인 요구로 1998년 기본 계획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2003년부터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평가 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박정 외, 2006; 이양락 외, 2005; 정구향 외, 2003, 2004).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 확보’라는 기본 목적하에 첫째, 국가 수준에서 교육 성취도를 파악하고, 둘째, 시간에 따른 성취도 추이를 파악하며, 셋째, 교육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교육 체제 배경 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여 교육 정책, 장학 지도, 교수 학습 개선 등 교육의 질 관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넷째, 질 높은 양질의 문항 및 평가 기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평가 및 교수 학습 방법을 선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수행되어 왔다.

현재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표 1】과 같은 설계로 시행되고 있다(박정 외, 2006; 이양락 외, 2005; 정구향 외, 2003, 2004; 최석진 외, 2002).

【표 1】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 설계

평가 대상	평가 범위	총 평가 시간	시행 시기	평가 영역	문항 유형	평가 도구
초등학교 6학년	초 4~초 6 전 과정	검사지: 280분 설문지: 40분	매해 10월 3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설문*	선다형 및 수행 평가	교과별 검사지 2종(A, B형) 설문지 3종 (학생, 교사, 학교장)
중학교 3학년	중 1~중 3 전 과정	검사지: 350분 설문지: 40분				
고등학교 1학년	고 1 전 과정	검사지: 350분 설문지: 40분				

평가 대상은 각 학교급이 종료되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2003년부터 매해 10월 3주에 이들 동안 평가를 시행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응시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제공한 후 평가 결과는 그 다음 해 12월에 발표해 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3개 학년 5개 교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되, 평가 도구 개발—평가 시행—결과 분석 보고의 주기는 2년이 되는 형태이다.

Ⅲ.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발전 방향

(1)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체제의 변화

첫째, 국가 수준에서는 표집 평가, 교육청 수준에서는 전집 평가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률을 높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전집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별, 학교별 성취도 차이를 드러내려는 주목적을 띠어서는 안 되며, 무엇을 위해, 즉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이러한 활용 방안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는 표집 평가, 교육청 수준에서는 전집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의 의하면 평가 대상 학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다만, 국가 수준에서는 일정 수를 표집하여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고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교육청 수준에서는 관할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성취 수준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장학과 교육청 단위의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평가 교과별 시행 주기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전집 평가와 표집 평가를 병행할 경우, 평가 대상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교육의 질 관리와 국민의 기초 학력 보장 차원에서 해당 학교급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를 2~3개 교과로 선정하여 시행 주기는 1년, 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까지의 연구 주기는 2년으로 한다. 기본이 되는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기본 교과 이외의 교과는 2~3년을 주기로 평가를 시행하고 이 경우는 표집 평가만 시행한다.

셋째, 기초 학력 보장과 개인 수준의 평가 결과 활용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학년을 결정한다.

전집 평가를 고려한다면 국민의 기초 학력 보장

을 위해 학생 개인에게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 학습이 필요한지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학교 수준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시행 시기는 1학기(4~5월)가 적당하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 학년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교 교육 결과의 점검을 위해 중학교 2학년,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의 결과로서의 학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성취 기준의 정의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기본이 되는 교과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는 국가가 보장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교육의 결과인 학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기초 학력의 개념이 무엇이고 학교 교육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할 것이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궁극적으로 평가하고 보장하려는 학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진 후 이를 구현할 성취 기준을 정의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성취 기준을 정의하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결과를 정립하는 중요 잣대이며, 학업 성취도 평가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성취 기준은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취 기준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2)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첫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 규정을 법제화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주기적 시행의 당위성을 명문화하고, 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를 법규에 포함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의 내용, 방법, 대상 학년 및 평가 영역이나 교과, 시행 주

기, 주관 기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 규정 및 구체적 사항들은 전집 평가를 도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연구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구 인력, 지원 인력, 예산 등에서 전집 평가를 운영하거나 교육청 단위의 전집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없다. 즉, 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개발, 시행, 분석 및 보고의 어느 하나의 과정에서도 철저함을 기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부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존의 평가원 체제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평가원이나 인수위 측의 판단이다(조선일보, 2008. 1. 4.)”는 내용은 위험한 판단이다. 이에 전집 평가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전집 평가를 위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 시행, 결과 분석 등을 주관할 충분한 연구 인력과 예산을 갖춘 연구 센터 중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 평가(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 NCA)에서 인쇄, 발송, 배부, 회수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COI(Central Office Information)와 같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도 필요하다.

(3) 자료 공개 및 국가 지표의 세분화

첫째, 평가 결과 및 자료는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 수준과 범위는 법제화해야 한다.

올해 초 인수위에서 전집 평가와 학교별 학력 수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정보 공개는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자료가 공개되면 학교 간 학력 차이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풀려 대입 전형에 어떻게든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료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듯하지만 이제 문제는 공개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즉, 평가 결과로 산출된 자료들의 활용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의 초점은 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와 자료 공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교육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그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명숙 외, 2005). 공개의 수준과 범위는 정보 공개법 시행령에 제정되므로 교육부의 수정 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문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NAEP,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인 TIMSS와 PISA 등과 같은 대규모 성취도 평가 체제들은 그동안 수집해 온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사이트에 사용 설명서와 함께 탑재하여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수집해 놓은 자료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고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 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정책 변화에 사용되고, 교수 학습 방법 지원에도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많은 연구자 및 정책 수립자들의 자료 공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자료 관리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화에 따라 국가 지표를 세분화하여 교육청 단위의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지표는 교육 체제의 상태, 변화 기능 또는

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 관련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Bottani & Tuijnman, 1994). 현재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학생 개인 수준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국가 지표도 국가 단위의 교육 지표만을 산출하고 있다. 실제로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교육의 질 관리 체제로서 학교 교육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 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어느 상태에 있으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4) 결과 활용 체제 구축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대규모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의 활용은 평가의 목적, 설계 및 시행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실시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의도한 목적 및 특정 방식의 평가 설계와 실시를 감안하여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활용할 주체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 교육청, 학교, 학생 개인 등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주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의 활용 주체에 따른 활용 방안은 앞으로 국내 외적 요구에 따라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① 국가 수준에서의 결과 활용

첫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성취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 교육청, 학교, 성, 지역 수준에서 파악된 학생

들의 교과별 성취 수준과 주기적인 변화 추이를 통해 국가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 개정에 기초가 되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 현실의 철저한 파악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결과인 학생의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경험적 자료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평가 내용이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개선 및 개정을 위한 경험적 지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즉, 현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아 추후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의 범위(scope), 계열성(sequence), 연속성(continuity) 및 난이도 수준(difficulty level)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육청 수준에서의 결과 활용

첫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과 변화 정도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각 시도 교육청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교육청 단위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수립된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교육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수행 전략이 필요하며,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장학 개선을 위해 활용한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 교육의 질 관리와 밀접

히 관련되어 있는 학교 장학 제도도 개선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의 단위 학교별 결과는 학교의 장점을 키우고 단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장학을 위해 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청 수준에서 지역적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청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역 수준에서 교육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 줌으로써, 지역 현실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③ 학교 수준에서의 결과 활용

첫째, 학교 현장의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 중의 하나는 질 높은 평가 문항 및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일선 학교의 평가 및 교수 학습 방법을 선도하는 데 있다.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개발하고 시행된 평가 도구는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 계획이나 실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 평가를 선도하며, 새로운 평가 방법 및 도구의 범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과별뿐만 아니라 하위 영역별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변화 추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교수 학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험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보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 교육의 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으며, 학교 수준에서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교수 전략 수립, 학생 지

도 방안 탐색 등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④ 학생 수준에서의 결과 활용

첫째, 개별적 학습 목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개별 학생에 대해 교과별 하위 영역별 성취 수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실제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 줌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별적인 학습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정보는 각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목표 수립을 통한 학습 개선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취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에서 설정한 준거에 비추어 판단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 추진해 나가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는 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 내실화의 실패나 학력 저하 현상 등은 학교 교육의 결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를 학교 교육의 산출 결과로 본다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그 결과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고함으로써 결과의 활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준

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에게는 장차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제이므로 복잡하고 종합적인 평가 연구이다. 그 설계와 수행은 단순히 평가 및 측정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육 정책적 판단이 상당 수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98년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의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해 온 지난 9년 동안 학업 성취도 평가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도 현성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발전적 변모는 현성적인 정책 판단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목적, 대상, 시기, 평가 영역, 성취 기준, 평가 유형, 표집 방법, 결과 분석 및 보고 방안, 점수 체제 연구, 맥락 변인의 조사 범위와 내용, 결과 활용 방안, 법적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탄탄한 설계와 고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명칭이 '학력 평가'로 좁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 1998년 연구부터 '교육 성취도 평가'라고 칭하였으나 초·중·고교육법에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교육부 및 교육청 등의 유관 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2002년부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명칭을 변경하였음(이하 이 글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로 기술함).
- 2) 엄밀하게는 200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부터 공식적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2년 시행된 성취도 평가는 교육 성취도 평가로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를 수록한 보고서(2003년 발간)에서는 학업 성취도로 명명되었다.

참고 문헌

- 권균 이은진 허형 황인창(1973), 학교 교육의 전국적 평가 연구-국민학교 교육의 성과, 행동과학연구소.
- 고정렬 이혜선 박종삼(1969),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 학력 조사, 교육과학 제36호, 중앙교육연구소.
- 김명숙 이규민 박종재(2005), 초·중등 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 과제 2005-17.
- 김명숙 노국향 박정 부재울 양길석(1998),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98-8.
- 김명숙 황혜정 이명희 최승현 강운선 박선미 김재춘 박정 설현수(1999),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 II : 사회 수학 영역 예비 문항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99-9-1.
- 김형립 김영호 안창일 장석우 박경숙 신동로 김종식 오성희(1975), 1974년도 전국 학력 평가 연구-초·중·고교-,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 김경희 김수진 손원숙 송미영 조지민(2006),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기술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O 2006-4.
- 이명희 채선희 설현수 김경희 김주훈 임찬빈 박선미 나귀수 송현정(2001), 2001년도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1-5-1.
- 이양락 조지민 송미영 시기자 김수진 이재기 김정우 진재관 김학희 김선희 고정화 신일용 장경숙 이문복 반재천 김재철 정유선 이선영(2005), 2004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5-1-1.
- 정구향 김경희 김재철 반재천 민경석 오희숙 권재기 이재기 박선미 진재관 조영미 이대현 이미경 신일용 김진석 이의갑(2004), 2003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4-1-1.
- 정구향 채선희 김경희 김재철 손원숙 이재기 민병곤 김정호 박선미 이봉주 조영미 이미경 정은영 임찬빈 김진석(2003), 2002년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3-1-1.
- 조선일보(2008), 학교별 실력 드러나 교육 현장 대변화 예고.
- 조선일보(2008), 학업 성취도 공개가 공교육 살리기의 출발.
- 조지민 김명화 최인봉 송미영 김수진 남민우 박종훈 박은아 김민정 도중훈 고정화 정은영 최원호 김미경(2007),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2003~2006년 변화 추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7-1-1.
- 최석진 김경희 양명희 이명희 윤재욱 장지영 정구향 이재기 강대현 나귀수 이봉주 정은영 임찬빈 이윤(2002), 2002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연구(1)-총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3-1-2.
- Bottani, N., & Tuijnman, A. (1994). *The design of indicator systems*. In S. C. Tuijnman, & T. N. Postlethwaite(eds.), *Monitoring the standards of education*, London: Pergamon.

나의 제언



글 장미현 (서울난우초등학교 교사)

사회 교과서

- 어떻게 쓰면 좋았다고 할까

“선

생님. 시간 있으면 내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좀 나올 수 있나요? 여기 좀 문제가 생겨서 .”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내게 걸려온 이 전화가 나를 교과서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흥분감을 안겨 주었다.

역시나 내 예상은 딱 맞아 떨어졌다. 사회과의 SEQUENCE(계열)가 되고 있는 공간 확대법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4학년 사회 교과서가 각 시 도별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그동안 1권이었던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가 줄지에 16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 방대한 작업은 각 시 도 교육청에서 집필진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문제는 시 도별로 각기 다른 교과서로 하려니 웬지 불안감이 엄습해 온 교육부에 있었다. 교육부는 뒤늦게 한국교육개발원을 주축으로 해서 통일된 ‘전국본’을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성격으로 내려 보내기로 하고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집필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집필진으로부터 일단 받은 원고를 초등 교과서답게 어린이 수준에 맞는 편집과 개고를 할 사람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바로 그동안 호시탐탐 교과서 작업을 노리고 있던 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당시 아동 중심주의와 실용주의의 물결을 타고 있던 교육과정 사조에 ‘쿵쾅’을 맞추어서 교과서 제시 형태를 만화, 일기, 편지, 기행문 등 다양한 종류의 문서 형식을 도입하여 편

집을 하였다.

그 후 본격적으로 5, 6학년 교과서를 집필하고 개고하는 작업을 하고 이어서 5년 만에 다시 바뀌는 제7차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비로소 교과서 작업이 사람을 잡는 작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교과서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책 3~4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함께 바뀌거나 개발되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 그야말로 교과서의 ‘거’자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신경이 급격히 예민해지는 정신 질환 증세에 한동안 시달리게 된다. 아직도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현행 제7차 사회, 사회과 탐구 실험용 교과서:** 실험용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실제 정본은 실험본과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 ㉡ 활동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과서, ㉢ 수준별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과서, ㉣ 제재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추구하여 한 주

제 내의 2~3개 제재가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과 활동으로 통합되고 연계된 교과서, ㉔ 정보와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여 편집상 혁신을 이루고 멀티미디어 학습과의 관련성을 제고하며, 지역 안에서의 세계화 시각을 반영하는 등으로 동심원 확대법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교과서 등의 여러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교과서를 바꾸게 되면 3차 시기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

1단계-1, 2학년, 2단계-3, 4학년, 3단계-5, 6학년

즉, 2개 학년을 묶어 동시에 교과서가 개발이 된다. 먼저 1학기 것을 만드는데 실험용 교과서를 먼저 만든 후에 실험 학교에 교과서를 배부하여 학습을 한 후에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다시 정본을 만들어 낸다. 실험용 교과서에서 최종 정본을 만들어 낼 때까지 3차례 정도 교정본을 찍어 본다. 정본이 나오기 전까지 심의와 수정, 교정은 수십 번도 더 한다. 따라서 교과서 개편이 시작되면서 교과서 작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5년이 소요된다. 그래도 정본이 나왔을 때 그걸 맘에 쏙 들어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대체 무엇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일까? 교과서를 집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현장 교사로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각 주제별로 다루어질 핵심 개념과 사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과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는 ‘개념 제시형’에서 ‘사례 제시형’으로, 체제 면에서는 ‘주요 사실 배열형’에서 ‘학습 활동 유도형’ 또는 ‘문제 해결형’으로 변해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각 학년에서 배워야 할 중심 주제는 선정이 되지만 그 주제를 지도할 핵심 개념은 축출이 되지 않는다. 사례 역시 어떤 사례를 예로 들

것인지 미리 정해진 것이 없다. 역사의 경우에는 인물이 확실하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집필을 할 경우에 집필자의 안목과 판단이 대단히 많이 요구가 된다.

교과서를 쓴 경력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쓰기 전, 쓰는 중, 쓴 후에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다. 내가 현재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예를 들면, 공장 견학에 대한 현장 견학 학습을 제시할 경우 어떤 공장을 예로 들 것인지는 선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공장을 바꾸느라 여러 번 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될 사회과는 주제뿐만 아니라 필수 핵심 개념과 인물, 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요소 축출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교과서를 재구성할 때에도 교육과정의 근본 목표를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둘째, 수업에 사용될 교과서의 수를 줄여야 한다.

사회 교과처럼 교사나 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과목도 드물 것이다. 과학은 『과학』과 『실험 관찰』,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 국어는 각각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각 시간별로 한 개씩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는 『사회』, 『사회과 탐구』, 『사회과 부도』는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고, 사회과 탐구가 요점을 정리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 공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정리할 곳도 없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회과 지도서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 현장에서 사회 시간이 되면 일단 책상 위에 올려진 책의 무게만큼 마음도 무거워지게 된다. 사회과도 통합해서 교과서의 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과 교재들의 성격 구분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

오늘날의 사회과 수업은 지식의 습득에 있어 전달과 기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서는 도저히 그 정

보의 양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끌 수 있는 ‘구성주의 교육관’을 반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교과서는 핵심 개념의 이해를 위한 문제 해결 활동과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구성하고 『사회과 탐구』는 기본 과정의 학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과목의 경우와 비교할 때,

- 말하기 듣기 쓰기: 언어 기능과 쓰기 기능을 합하여 주로 말하고 쓰는 활동을 담았다.
- 읽기: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문장을 파악하고 독해력을 향상 시키는 활동을 위주로 구성한다.
- 수학: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담았다.
- 수학 익힘책: 배운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다져 나가는 문제집 형태이다.
- 과학: 주제와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실험 관찰: 실험한 결과를 정리하고 그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는 워크북 형태이다.

각 교과서별 내용을 떠나서 그 성격은 엄밀하게 구별이 간다. 그러나 사회과의 경우,

- ◆ 사회: 주제에 따른 학습 내용이 수업의 흐름이나 과정에 따라 전개가 되어 있다. 이때 전개는 읽기 자료, 사진 자료, 삽화 자료, 지도 자료, 통계 자료, 사료 등이 제시된다.
- ◆ 사회과 탐구: 사회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이때 자료는 워크북, 읽기 자료, 사진 자료, 지도 자료, 통계 자료, 사료 등이 제시된다.
- ◆ 사회과 부도: 주로 지형도, 주제도 등의 지도와 통계 자료가 제시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회, 사회과 탐구, 사회과 부도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쉽게 교사가 그날 뭘 해야 할지 감을 잡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현장에 적용하기 편한 교수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사회과의 경우 이번 차시의 지도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만큼 교사가 갖는 부담이 많은 과목이 된다. 다른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자체가 워크북 형태를 많이 띠기 때문에 자습서와 같이 수업이 흐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사에 따라 재구성하거나 동기 유발을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교과서 흐름에 맞게 지도한다. 그러나 사회과의 경우에는 딱히 본시 학습 내용을 지도하기 위해 써야 할 교수법을 고르는 데 고민을 적잖이 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것은 바로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해결형 구조로 제시하여 종전처럼 교과서를 읽게 하여 주요 사실이나 개념을 찾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을 전개해야 하는 기본 방침이 설정된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과 탐구를 워크북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 사회과 탐구를 집필할 때 되도록이면 워크북 형태를 많이 넣고 싶었지만 그런 형태가 많이 읽기 자료나 다른 자료로 개고가 되었다. 교과서가 워크북 형태로 만들어지면 교수법이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사회과 교과서는 교수법을 제시해 주고 있지만 사실 제시된 교수법을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기에 난감한 것들이 있어 교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은 교사가 사회 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최소 7개 이상의 과목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법 선택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일관된 구성 체제가 필요하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에 비해 사회과는 도입, 전개, 정리의 구성 체제가 부족한 편이다. 현행 제7차 교과서를 보면 각 주제마다 바로 학습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사회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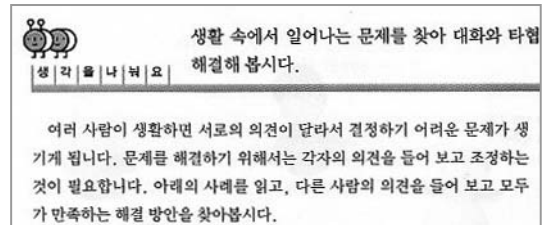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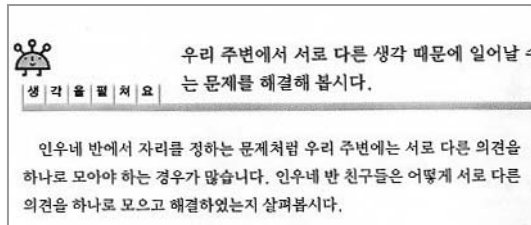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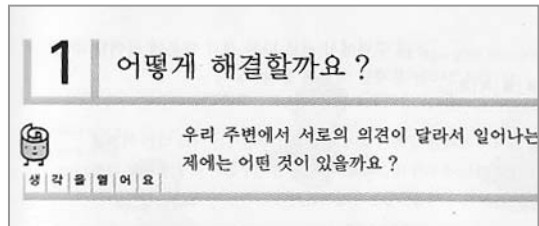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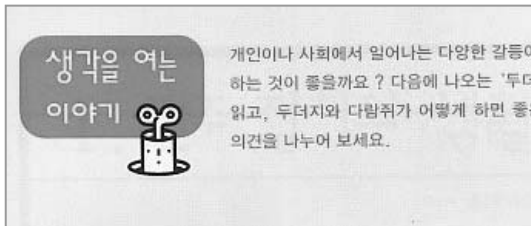
● 연표와 역사 지도의 쓰임새를 알아보자.

민호네 가족은 지난 주말에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불국사였다.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바로 학습 내용 전개가 된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러나 다른 교과와 경우에는 학습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진단하거나 예비 학습, 기능 익히기, 정리하기 등의 단계에 따라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가 각 단원별로 계속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제시

된다.

따라서, 교사가 오늘은 진단 차시를 했으니 다음에는 본시 학습을 하겠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회과의 경우에는 그런 예상을 하기 참 어렵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주제를 교사가 적절히 알아서 자른 후 차시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교과서 검 인정 사업에 대비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소위 '모범 교과서'를 제작한 적이 있다. 이 모범 교과서를 보면 일관된 구성 체제를 만들어 단원 별로 통일되게 전개하고 있다.



모범 교과서 내용 제시 형식

1. 제재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제시-2. 학습 동기 유발-3. 주요 학습 내용 전개-4. 적용 및 심화 등과 같은 형태로 제시되며, 각 주제별로 이와 같은 형태로 교과서 형식이 전개된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학습할 내용에 대한 논의나 심의는 빠고 형식만으로 보면 대단히 일관성 있게 전개가 되어 뭔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느낌을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상은 내가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들은 것, 느낀 것, 배우게 된 것 등을 한데 모아서 풀어본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건데 너무 양적인 것에 치중되다 보니 질적인 것이 소홀한 것이 많아 격

려를 듣기보다는 질책을 들을 것이 더 많다. 2007년 2월에 새롭게 바뀐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이 고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뭔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앞의 것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바꾼다고 할 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사회과 교과서는 무언가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 연

나의 제언



글 **한춘희** (서울천동초등학교 교사)

현장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교육과정 개정

20 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2007. 02. 28.)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 실험용 교과서가 시범학교에 투입되어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후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이할 점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방식인 전면적, 주기적, 일시적 개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수시적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도입되기도 전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제7차 교육과정을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 일시적 개정이다. 왜냐하면 제7차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개발한 연구진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연구진은 ‘공모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구진 구성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연구진이 구성되어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 작업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일시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2007년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에서 한국사 내용을 6학년 1학기에서 5학년 1, 2학기로 편성한 것은 역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3~6학년 사회과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분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누가 부분적인 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은 부분 수시 개정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각론인 교과 교육과정은 분명 일시적 전면적 개정이다.

▣ 영어 공교육 강화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야

요즈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이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사회적 국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과정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는 교육과정 반영에서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중반에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교육 강화 방안이 사회과 교육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무슨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3, 4학년은 주 1시간, 5, 6학년은 주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 3시간으로 늘려서 운영하려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서만 감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는 책무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실시되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학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과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교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될지 모르지만, 일선 현장의 현실적인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월 2회 주 5일 수업제를 시행하면서 국가 수준의 시간 배당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교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및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는 주로 주인 없는 교과인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 운영하였으나 교과 외 교육과정인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서만 감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는 책무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실시되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학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시간 배당 기준을 채우지 못한 교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교사 재량 또는 융통성으로 1년 동안 배울 학습 내용의 재구성을 통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배정된 시간 안에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답할지 모른다. 또한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 교과의 교과서를 만들 때는 예시적이지만 국가 수준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정해진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학습 내용을 구

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교과 및 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어 공교육 강화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논의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동안 교육과정 적용을 통하여 나타난 다양한 개정 요인들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수문별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어떤 논리로 교육 공동체를 설득하고 들어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중요한 논리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획일적이고 주입식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등이 부족하고, 능력과 적성, 흥미가 다른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수준(능력, 흥미, 적성 등)에 따라 비슷한 학생들끼리 지도하면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럼 그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었는

가? 아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수준별 수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수준별 수업은 지금까지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금까지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필 위주의 단답형, 그리고 결과 위주의 평가로 학생들의 창의성이 결여되고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므로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수행 평가'이다. 이제 평가의 제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는가? 지금 수행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교육 개혁이고 그 핵심이 지식 활용 능력이니까 평가도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한다. 수행 평가 대안인 학업 성취도 평가를 국가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및 개인별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현장 교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가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정보 능력의 차이로 서구에서 유행하는 것이 5~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도입되던 것이 지금은 곧바로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우리 교육에 도입된 이론들이 외국 교육 이론이라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외국 교육 이론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 및 해결, 보완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 이론으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교육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외국 교육 이론의 실험장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육을 외국 이론의 경연장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외국 이론일지라도 우리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은 제대로 정착할 수가 없고 시대적인 유행이나 흐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육 정책들이 '열광-과학적 지지-실망-비난'의 과정을 거쳐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현실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관심과 현실 여건 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 개혁을 통해 제안된 여러 방안들이 교육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도입, 실행, 평가, 반성, 재도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우리의 교육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왜 영어 교육만 강화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은가? 세계적으로 언어 인구를 따져 보면 중국어도 그리고 인도어도 글로벌 언어로서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방법은 어떠한가? 국가적인 글로벌 인재, 즉 외국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인재만 육성하면 되지 않을까? 전국민이 외국어 특히, 영어에 올인하는 나라는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에 영어 교과 도입을 반대한 사람이다.

영어라는 한 교과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교과가 초등학교에 교과로 들어온 다음에 나타날 문제점들 때문이다. 과연 초등학교에 영어가 도입되어 지금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인가? 그동안 모든 국민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영어 사교육에 매달린 효과라고 하면 지나친 억측인가.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면 좋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 사회적 요구 반영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진과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교육과정 지향점에 대한 기본 가정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즉, 이상을 지향하며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안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과정이 실천될 현장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일반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을 제안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은 이상보다는 철저히 현실에 터해 개발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라도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 외형만 있는 죽은 교육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현실과 이상에서 이상에 무게 중심을 둔 교육과정을 제안하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중심은 당연히 현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에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교육과정 개정(개발, 결정) 시스템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사들의 전문성은 날로 신장되고 있고, 정확한 교육 현실 인식이 교육과정 구성 및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초등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환경, 즉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에겐 가르치기 쉽고, 학생에겐 흥미와 지식을 동시에 갖게 할 교과서와 학습 자료의 개발, 학교 내 외 교육 활동을 믿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시스템 확보(특히 안전사고) 등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은 교과 교육 연구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각 교과 교육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면서 교과 교육 연구 활동이 국가적인 시험(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과 교육을 담당할 때는 각 교과 교육 연구실이 상설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각 교과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교육 현장의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차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작업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교과 교육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과 교육 연구실은 비상설 기구로 존재하여 각 교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어디에도 각 교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은 없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각 교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원대학교 또는 교육 대학교에 교과 교육 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중등 교과 교육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기관 간의 협력 체제도 구축되어야 한다. 각 교과 교육 연구 결과들이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될 때 좀 더 나은 그리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일선 현장에서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교육 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연**



편집자의 역할에 대한 단상

글 김희중 (대한교과서(주) 차장)

편 집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고를 청탁받고 나서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길을 가다가도, 지하철을 탔을 때에도 고민해 봤지만 도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기는 하다. 술이다.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먹은 술과 그에 얹힌 수많은 에피소드이다. 그렇지만 자칭, 타칭으로 인정하는 교양인이자 지식인인 편집자가 술 이야기만 펼쳐 놓는다면 분명 일은 안 하고 술만 먹으면서 회사를 다녔구나 하는 따가운 시선을 면할 길이 없겠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그 생각을 내려놓았다.

무엇을 써야 하지? 무엇을 써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내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무엇을 써야 유익한 글이라는 평판을 얻을까 하는 개인적 허영심도 나를 지배하면서 머릿속은 그야말로 지글지글 열이 끓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 자신이 살아온 것을 솔직하게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진솔한 글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편집자로 살아오면서 생각한 점을 솔직하게 보여 주자.’ 라고 마음먹은 뒤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하였고,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상을 펼쳐놓기로 하였다.

☞ 진정한 프로로서의 편집인에 대한 단상

출판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친한 대학 선배와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 대학에 다닐 때에는 거의

삼차를 가야 접할 수 있었던 병맥주에 혹해 있던 나에게, 술자리가 어느 정도 익자, 선배는 나에게 불쑥 ‘진정한 프로가 되어야 돼.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프로. 진정한 프로 정신을 가진 편집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했다. 병맥주에 혹해 있던 나에게 선배의 그 말은 사실 술자리의 일부였을 뿐이었고, 그래서 건성으로 ‘네, 네.’ 라고 대답만 흘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본격적인 편집 업무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여겨질 만큼 띄어쓰기, 오타자의 기본적인 능력 부족에서부터 편집 기술적인 것, 내용이나 문제 검토 등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프로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서툰 생각으로 ‘아! 이것을 잘 알면 프로 편집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부족함을 매우기 위해 노력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프로 편집자가 되기 위해 문제 푸는 능력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였고, 나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같이 입사한 동년배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자연히 맡은 업무 또한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던 것이다. 프로 편집자가 되는 것을 단순히 오류 잘 잡아내고, 문제 잘 풀고, 누구보다도 많은 내용을 알고 문제를 출제할 줄

이는 능력이라고 여긴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수행할 줄 안다고 해서 전문 편집자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이는 편집자가 아닌 단순 교정자일 뿐이었다.

대리 직급을 달면서 나에게 할당된 새로운 교재 개발 능력 요구는 어찌 보면 황당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기의 도래였다. 기획력 부재와 편집의 전반적인 시스템 이해가 부족한 나에게 새로운 교재 개발은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왔다.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이러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되풀이되고 있는 학습물 출판사가 지닌 악습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대리 이전의 사원 시절에는 편집자보다 교정자가 되기를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자연히 대리가 되어 기획 업무를 수행하기를 요구받게 되면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하중을 느끼고 능력 부족이라는 망상에 시달린다. 또, 나름대로 구상한 기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성이 없다든지, 창의적이지 않다든지 하는 딱지를 달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나 역시도 겪어 온 터라 요즈음에는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에게 항상 교정자가 되지 말고 편집자가 되라고 당부하면서 편집 기획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하고는 한다.

여하튼 나는 편집 기획 능력의 부재를 느끼면서 다시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 능력이 단순히 책을 만드는 그 자체의 기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그것은 마케팅과 영업이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훌륭한 책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책이라고.’ 우스갯소리이지만 사실 책을 팔지 못하면 출판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다니는 우리는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없기에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잘 팔리는 책을 만든다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도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

는 것이기에 편집 기획은 더 많은 것, 즉 마케팅과 영업,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눈을 요구한다. 나에게는 이런 공부야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굴리는 그동안의 행태를 버리기로 하였다. 시장에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학원들을 돌아다녔고, 지방 총판도 아무 주저 없이 가고자 하였다. 그와 더불어 술자리도 편집자만의 술자리에서 벗어나 영업자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시장의 흐름이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책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들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나를 급격하게 편집 기획자로 바꾸지는 못했다. 내 속에 남아 있는 교정자로서의 인습은 뿌리 깊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편집자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였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진정한 프로가 되자, 유능한 편집자가 되자.’라는 나의 생각은 기존의 사고의 틀을 점차 변모시켰고, 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하였다. 점차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맞추어 어떤 책을 낼까 하는 고민의 정도도 넓어졌다. 그래서 선배 편집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에 대한 반응도 들어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출판 기획에도 나름의 생각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정은 ‘기획하면 뭘해. 내가 사장 이 아닌 한 문혀 갈 건데.’라는 선배의 자조 섞인 말과 더불어 점차 그 빛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학습 출판사가 지닌 인습 때문이었다.(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좀 더 치열하게 대들어야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훌륭한 편집인이 될 수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많이 대들어 봤다고.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허무함이었다고.) 직원들이 낸 기획안은 거의 채택되지 않고, 이러저러한 말을 붙여(이 정도면 다행이다.) 안 된다고만 말한다. 심지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한다. 당연히 내 나름대로 시장 흐름이나 시대적 변화 등을 고민하여 쑥스럽게 내밀던 기획안이 나 생각은 가차없이 무시되었다. 더욱 더 열을 받게 한

것은 내가 낸 기획물이나 생각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개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텐데, 뒷사람은 나를 여전히 교정자로 가둬 놓고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어느 날은 잔뜩 화가 나서 편집 주간에게 따져 물었다. ‘왜 올린 기획물을 보고 제대로 읽지도 않느냐고, 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노라 알려 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한 가지는 염두에 둘 만한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편집 주간은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도 변한 것은 별로 없었다.

이후, 나는 직장을 몇 번 옮기고 나서 그야말로 내 손으로 책을 기획하여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 시장 흐름이나 변화는 어떠한지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그를 통해 예측을 하면서 그에 걸맞은 책을 내고자 고민하였다. 그리고 영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영업자와 상의하기도 하고, 책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아마 이 시기가 내가 편집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이때 만든 책 중에는 잘 팔린 것도 있었지만, 잘 팔리지 않은 것도 있었다. 잘 팔리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분석하면서 나를 좀 더 채찍질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편집자의 길로 진정 들어섰음을 깨닫게 되었다.

프로 편집자가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개인이 만 들어가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가 편집자로서의 역량을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여건, 즉 기획을 해서 상품인 책으로 출간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편집자를 키우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와 진정으로 기획을 상품화하게 할 수 있는 회사의 성숙된 여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역시 운이 좋아 그리 길지 않은 시절에 내 나름대로 기획한 것을

실행해 보았지만, 아직도 많은 편집자가 생각한 기획안이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편집자를 회사에서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사를 살찌우게 하는 일일 것이다.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해 본다. 17년 전 선배가 말한 진정한 프로 편집인이 되었느냐고. 감히 나는 그렇다고는 단언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프로 편집자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나 자신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사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좋은 책, 잘 팔린 책을 만들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요즈음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회의에 빠져 산다. 회의를 하면 할수록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고등 학교 국어 교과가 검정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다른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보다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그래도 교과서를 만들 때마다 겪게 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없는 머리를 아낌없이 쓰고 있는 중이다.

교과서를 만들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교과서는 집필자의 총 역량과 편집 능력의 총체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디자인에 있어서의 디자이너의 역량도 집결되는 곳이기도 하다. 당연히 어느 책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내용 또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자가 지닌 학습 권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모든 편집자의 제일 큰 목적은 교과서를 합격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회사 역시 회사의 명예와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오늘날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이것이 합격되는 것에만 자족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프로 편집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프로 편집자는 교과서를 합격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자신이 만든 교과서가 얼마나 채택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나 역시도 합격을 떠나서 검정 교과서를 만든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과연 편집자의 역할이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합격시키는 것에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경쟁에 있다. 특히나 무한 경쟁이 강조되는 오늘날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이것이 합격되는 것에만 자족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프로 편집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프로 편집자는 교과서를 합격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자신이 만든 교과서가 얼마나 채택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시킬 수 있을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혹자는 교과서를 만들기에다 정신이 없는데 채택까지, 게다가 새로운 이윤을 창출시키는 데 노력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생각해서 교과서 채택과 새로운 이윤 창출을 뒤로 미룬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선점된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몇 배의 노력과 값어치를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앞에서 진정한 편집자가 되려면 영업,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이 좋은 책, 잘 팔리는 책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검정 교과서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익 구조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교과서 및 교과서로 창출되는 이익을 고려하는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를 합격시키는 것만이 내 몫이고 교과서를 채택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떠넘긴다면, 얼마 안 가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할 것이다.

교과서를 채택시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시키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부단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편집자가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닐까? 진정한 프로 편집자만이 회사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당신은 어떤 편집자가 될 것인가?

회사에 사표를 던질 때, ‘잘 가!’ 라는 인사를 받는 편집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몇날 며칠이고 남아 달라고 시달림을 당하는 편집자가 될 것인가? **연**



교과서는 비독의 정석이다

글 안성운 ((주)천재교육 초등개발본부장)

☐ 강산은 몇 번이나 변하였나?

출판계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어느덧 20여 년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 이에 따르자면 세상이 두 번 정도 바뀌었겠으나, 요즘같이 변화의 흐름이 급박하고, 그 압박이 강해진 때에는 그 이상 바뀌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20여 년 세월 동안 교육과정 또한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나 또한 초로의 말미에 서 있게 되었고, 개인적인 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 원고 청탁을 받을 때에는 교과서의 변천사와 나의 변화 과정을 연결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쾌히 승낙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막상 원고를 쓰려다 보니, 나의 장단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까 싶어 노심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왕 글을 쓰기 시작한 이상 교과서와 관련한 내 경험들을 자연스레 쏟아놓아, 지금 교과서를 개발하는 분들께서 쓸 만한 것이 있다면 취하시고, 비록 내겐 감추고 싶은 창피한 일이라도 그것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19로(路) by 19로(路), 361방(房)

(1) 신출내기에서 실무 담당자로!

내가 교과서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제5차 교육과

정 때였다. 그 당시 나는 막 출판계에 입문한 새파란 신입 사원이어서, 교과서 개발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어과의 문학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훌륭한 지침들이 큰 도움이 되었고, 처음으로 교과서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로부터 5년 세월이 흘러 제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다시 본격적인 교과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때는 8여 년 동안 같고 닮은 편집 경험을 토대로 실무자로서 자신 있게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개발에 뛰어들었다.

문학 교과서 작업은 저자로 섭외된 대학 교수님과 편집자의 충분한 교감 덕에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대표 저자는 지방에 내려가 있는 유명 K 교수였고, 다른 한 분은 일본에 있는 S 교수여서 서울에 있는 단 한 분 K 저자와 일을 하다시피 했다. “교과서는 저자만 잘 만나면 기본은 한다.”는 말을 실감하는 계기였다.

사실 실제 집필은 대표 저자보다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대표 저자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 저자는 편집자의 기획 의도에 맞추어 구석구석 들어가는 장치 등의 아이디어 창출을 도맡았기에 더욱 그렇다. 제자들 중엔 처음으로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법 고생이 심했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대로, 경험 있는 분들은 경험 있는 대로 모두가 열심

이셨다.

검정 교과서 개발에 뛰어든 이상, 목표는 합격이었다. 국정 교과서와 달리, 검정 교과서는 합격·불합격의 당락이 있어 인삼을 먹을 것인지, 무를 먹을 것인지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결과는 합격이었다.

이 작업을 통해 교과서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지는 고귀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작업의 진행 과정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전체적인 것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검정 교과서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당락이 있기 때문이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처럼 요행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취지와 집필상의 유의점(이 ‘집필상의 유의점’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편찬상의 유의점’으로 바뀌었다.), 검정 기준에 입각해서 기획하고 집필하고 다듬고 꾸미어 완성된 제품으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습물 출판 편집자는 교과서를 만들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출판인이라고까지 감히 말할 수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출판인으로서 편집자적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 작업은 개발 기간 동안 쉼 없이 계속된다. 밤을 낮 삼아 야근이며 철야를 하는 건 일상사이다. 주요 시점마다 한 순간이라도 그 때를 놓치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배가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취지와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넣고 빼기를 반복해야 함은 물론, 교과 내용에 어울리는 사진이나 삽화를 넣기 위해 수없이 넣고 빼기를 반복해야 한다. 또한 사진이나 삽화는 교과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교과 내용과 동떨어진 지면 채우기식의 사진이나 삽화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뿐인가? 교과서 개발 시 원고 검토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교육과정 취지와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용 검토 후, 원고 쓰기를

수차례 반복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저자와 알력이 생겨 때론 언쟁이 불기까지도 한다.

한번은 이런 때도 있었다. 중학교 한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저자의 오만이 극치를 달리는 경우였다. 자신이 쓴 원고는 토씨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한(솔직하게는 편벽한) 분이었다. 대개 편집자들은 이런 저자를 싫어한다.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옹고집을 부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별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회의 자리에서 저자의 편을 들어 주고, 후에 전화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회의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언쟁으로 번지게 되어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이후의 작업도 불편해진다. ‘understand’라는 말의 뜻처럼, 상대방보다 낮은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배려가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꼭 필요한 덕성인 것이다.

바둑은 두 명이 흑과 백의 돌을 바둑판 위에 번갈아 놓으며 집을 차지하는 것을 겨루는 놀이이다. 가로와 세로 각각 19줄의 선이 그려진 바둑판 위의 각 교차점(모두 361개)에 돌을 두며, 공격과 수비를 하는 전략 게임이기도 하다. ‘19로(路) by 19로(路), 361방(房)’은 이같은 바둑의 전략 게임에서 비롯된다. 바둑에는 정석이라는 포석에 수많은 대응 수와 변화 수가 존재한다.

교과서 개발은 바둑의 오묘한 대응 수와 변화 수처럼 변수가 많은 작업이다. 교과서 개발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므로 편집자와 저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저자가 아무리 권위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집필하면 과감하게 맞서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즉,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 의견을 조율하고 수정하여 교육과정에 맞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 개발은 바둑의 정석과 같다.

(2) 아, 디자인, 디자이너!

다시 또 시간이 흘러 교과서 작업은 제7차 교육과정에도 이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디자인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존의 단도이던 교과서들은 2도 또는 4도로 컬러화하여 보기 좋은 교과서가 되었다. 바뀌는 교과서로 공부할 학생들은 이른바 영상 세대라 불렸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예전의 고리타분한 교과서로는 시선을 끌 수가 없을 터이니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고 도전하는 게 교과서의 사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이처럼 중요한 디자인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개발을 담당하고 교과서의 내지 디자인을 맡았던 북 디자이너가 종적을 감춰 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디자이너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내지 디자이너를 새로 선정하려고 해도 계약금을 준 이상 그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교과서 제출이 세 달 가량 남은 어느 날, 그때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를 하느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일 무렵, 드디어 내지 디자이너와 연결이 되었다. 디자이너의 변명은 들을 여지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교과서 디자인을 잘 마무리하여 편집자와 저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서 디자인이 되게 하는 것뿐이었다. 다행히 디자이너의 신속한 대응으로, 새 교과서 디자인이 저자와 편집자의 의도에 맞아 통과되었다. 편집자에게 있어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는 건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빨라짐을 의미한다. 큰 틀의 디자인을 유지한 채로 진행해 오던 작업은 디자인 완성으로 가속도가 붙게 마련이었다.

이제 남은 건 교과서 내용을 완성된 디자인에 잘 담는 것이었다. 저자들이 집필한 원고를 토대로 빼와 살을 붙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교육과정 취지와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에 유의하여 내용 검토 후, 부족하면 채우고 넘치면 빼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매일

늦도록 자료실에서 사진을 찾거나, 사무실에서 교정과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일반 학습 참고서 교정은 4~5교 정도에서 OK 교정이 나지만, 교과서는 당락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10교 이상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려는지 날이면 날마다 편집자 옆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냈다. 그 디자이너가 왜 잠적했는지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 8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만의 퍼블리시티(사생활)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다만 그녀를 만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을 뿐이다.

(3) 밀고 당기기

교과서 저자와 편집자는 교육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교육과정 연구는 교과 성격과 목표 및 내용 체계, 방법과 평가 등을 잘 살펴서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과서상(敎科書像)을 정립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분석하다 보면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서상, 즉 교과서 건본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 기준을 연결시켜 유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수차례의 기획 회의가 끝나면 원고 집필에 들어간다. 그런데 기획 과정에서 종종 편집자와 저자가 교과서 편집 체제를 결정하는 신경전이 벌어지곤 한다. 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 교과서를 개발할 때 이런 마찰이 있었다.

당시 편집자와 저자들이 각각 기획 시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는데, 저자들은 아무도 시안을 만들어 오지 않았다. 그나마 단 한 분만이 만들어 온 체제는 제6차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편집자와 저자의 디자인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매우 컸다.

어찌 됐건 저자들이 시안을 준비해 온 것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편집자의 체제를 설명하기로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획 의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그때 나는 기존의 교과서 서술 방식(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항목 순의 스토리 형식)으로는 당시 학생들의 자유분방한 시각과 교사들의 안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흥미를 느끼고 쉽게 지루해하는 영상 세대들의 트렌드를 고려한 교과서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존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조금 파격적인 기획을 해 둔 터였다. 교과서는 공급자인 출판사(편집자)나 저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처음 보는 편집 체제에 몇 분의 저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마저 느꼈다. 순간 나는 편집자적 시각을 너무 강조한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마련한 체제여서인지, 저자들도 별 이견 없이 편집자의 시안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기획안을 토대로 건본 원고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원고를 집필하기로 했다.

수차례에 걸쳐 저자들과의 검토 회의를 통해 실제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몇 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치다 보니, 처음에는 낯설어 비판적이었던 저자마저도 새롭고 참신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은 몇몇 한문 교과서가 이와 비슷한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개발 당시에는 상당히 독특한 체제로 인정받아 부뚝했던 기억이 있다.

Field Manual


흔히 교과서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한다. 그만큼 교과서를 개발하여 얻는 부가가치는 영세한 출판 산업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구나 하고픈 사업이다. 이런 까닭에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지금과 같은 개정된 교육과정 체제하의 교과서 편찬 시기가 돌아오면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열을 올린다. 올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에는 영어와 수학 과목을 개발했는데, 그 결과 발표로 편집자들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교과서를 개발하여 합격한다면 출판사는 교과서라

는 확실한 이익이 확보되는 셈이다. 게다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별다른 경쟁 없이 참고서(자습서 포함), 문제집 등의 교재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악한 출판 환경에서 교과서가 메리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 까닭이다. 이 같은 교과서 메리트 때문에 검정 교과서 개발에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교과서는 다음 시장 개척을 위한 초석이 되기에 교과서 사업에 매진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FM대로 해!’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의 ‘FM’이란, ‘Field Manual’의 이니셜로, 우리말로 하자면 ‘야전 교범(野戰 敎範)’이란 뜻이다. 사실 말이 쉬워 FM이지, FM대로 한다는 것은 무척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답답하기까지 한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FM대로 한 것이 가장 문제 없는 결과를 낳고, 과정상의 오류도 줄일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다.

교과서 개발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저렇게 잔재주를 피워 봐야, 오히려 돌아가는 길일 뿐이다. 교과서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과정과 편찬 지침(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에 충실하도록 기획, 개발의 전 과정을 FM대로 하는 것만이 지향점을 잃지 않게 한다. 그래야만 교과서 개발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합격’이란 두 글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물이 학교에서 쓰이는 것을 자랑스레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과서 개발자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4)

김길수

-영진닷컴 사장-



“IT 대표 출판사는 어디일까요?”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진닷컴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1987년부터 대표적인 IT 서적 출판사로 성장해 온 영진닷컴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IT 매뉴얼, IT 수험서, 다양한 실용서 및 단행본을 출간할 뿐만 아니라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 고등학교 컴퓨터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IT 도서라면 초등학교 인정 교과서, 중 고등학교 교과서, 활용 매뉴얼서, 수험서에 걸쳐 모든 IT 분야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는 영진닷컴을 찾아가 김길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① 영진닷컴은 어떤 출판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회사의 도서를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7년 IT 출판을 시작으로 성장해 온 저희 영진닷컴은 IT 출판 및 IT 수험서, 단행본, 실용서, 교과서 등 종합 출판사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가장 잘하는 사업의 선택적 집중화를 통해 도서와 연계된 모든 사업의 진소시업을 개방하여 보다 유

연하면서도 전문화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영진닷컴이 국내 IT 출판 시장 1위 석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제작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더욱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선택적 전문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의 IT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의 기술서, 실용서 출판의 대표답게 우리나라의 기술 콘텐츠를 국내외 시장에 알리기 위한 선봉장이 되어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는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해외 유통 전문 업체와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도서들의 수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여 더 좋은 도서 개발에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과 온라인 교육 사업에 저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책을 주문하고 그 책이 배달되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러한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출판사를 잇을 수 없는 설렘을 줄 수 있는 책을 만들도록 하겠으며,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의 색채와 방향을 바꾸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출판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저희 출판사는 용기와 노력, 절제를 바탕으로 기술서, 실용서의 세계적인 대표 회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② 영진닷컴 하면 소개를 해 주신 것과 같이 IT 전문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IT 서적에 머물지 않고 제7차 교육과정 때 교과서 발행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영진닷컴은 많은 독자의 사랑으로 IT 매뉴얼, IT 수험서, 단행본, 이러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21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영진닷컴은 제7차 교육과정에 컴퓨터 교과목이 포함되어 컴퓨터 출판 업계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던 기업으로서 저희 도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환원해 드리고자 당시로는 파격적인 구성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과서와 일반 IT 매뉴얼 도서는 구성 방식이나 진행 방식 등의 차이가 많았지만 당시 개발과 디자인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한층 더 성숙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컴퓨터 분야라면 당연히 영진닷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필자 선생님들은 교과서 출판사로는 생소한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진행 담당자와 디자이너들과 함께 수많은 밤을 새우며 합숙에 가까운 작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로 인해 해야 할 일도 늘어 무척이나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중학교 『컴퓨터』 교과서와 고등학교 『정보 사회와 컴퓨터』 교과서, 고

등학교 『컴퓨터 일반』 교과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을 통하여 교과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분야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교과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③ 21년간 꾸준히 IT 출판 분야에 1위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느끼는 IT 교육의 변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997년 IMF를 겪으면서 경제에 대해 누구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투자에 소극적일 때 저희 영진닷컴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IT 출판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누구나 자격증이나 컴퓨터 관련 기술을 익히기 위해 책을 사 보기 시작하고 1인 1자격증 시대를 열어가면서 IT 교육 분야는 영진닷컴과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보 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고 정부의 IT 교육에 대한 정책 발표와 지원으로 IT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잘 구축된 인터넷 정보망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 2007년에는 WiBro 기술을 세계 표준 기술로 채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의 IT 교육은 OS, 오피스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기초적인 시장을 넘어 전문인들이 양성되고 있는 세분화된 시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누구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 방침에 따라 컴퓨터에 대한 주요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컴퓨터를 만지고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초 전문 지식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동향을 보면 단순한 상업계, 공업계가 아닌 인터넷 고등학교, 정보 과



현재 중학교 정보 과목은
3권으로 분리되어 검정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를 내용의 난이도에 따른 연결 고리 선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정 전체 내용의 흐름과 교육 현실에 맞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배려를
조금 더 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 고등학교, 로봇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의 개설 학과들도 전자 계산이나 컴퓨터 공학뿐만이 아닌 IT 학부, 디자인 학부, 게임 학부, 애니메이션 학부 등 세분화, 전문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기초 학문뿐만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재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앞선 질문의 답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보 과목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은 관련 전문가들이 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감안하여 많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해 이렇게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을 발행하고 집필자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관련 교육 지원을 하였고, 최근 개정 교육과정 발표와 더불어 개정 교과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집필자분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컴퓨터 과목의 개정 방향은 시

대에 흐름에 맞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 컴퓨터 교과와 비교해서는 컴퓨터의 활용 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폭 축소된 것이 약간 우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목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어서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개정대로라면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컴퓨터의 원리,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 정보 윤리 교육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해당 내용들을 학습하면 우선 논리력 및 창의력 사고 능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다른 과목의 학업에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겠지만 다소 심도 있고 비중이 높은 내용이어서 접근성 면에서 기존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 정보 과목은 3권으로 분리되어 검정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를 내용의 난이도에 따른 연결 고리 선상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정 전체 내용의 흐름과 교육 현실에 맞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배려를 조금 더 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일본의 교과서의 경우 우리와 같이 교육과정상에 4~5개의 세부 영역과 학년별로 배워야 할 내용을 나누어 적용한 교과서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오피스 프로그램 등과 같은 활용 교육 분야 교과서, 그래픽과 같은 분야의 교과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학생이 선택을 할 분


야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와 학생의 수준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㉔ 출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진닷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방향과 향후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닷컴은 다양한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출판 사업을 교두보로 해서 미디어 콘텐츠 사업, 웹 콘텐츠 사업 등 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과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올 한 해 영진닷컴은 IT 매뉴얼서, IT 수험서, 단행본(경영/경제, 자기 개발, 요리, 초등 학습물 등) 300여 종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인 IT 분야에 집중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IT 출판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많은 종수를 출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출판 시장이 다소 축소되었다고 회사가 움츠러든다면 시장 상황처럼 점점 더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영진닷컴은 지난 IMF 때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역시 IT 출판 시장의 1위 기업다운 면모를 보여 줄 것입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닝 서비스인 영진닷컴e-러닝을 비롯해 고용 보험 환급 과정인 영진인재개발원(영진 HRD)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닷컴e-러닝 서비스는 21년을 한결같이 독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노력한 IT 수험서의 강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IT 수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20년간 유지해 온 영진닷컴이 보다 알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최고의 영진닷컴 전문 저자분들과 함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저자 직강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IT 수험서 이외에도 영진닷컴에서 발간되고 있는 베스트 IT 도서들을 선별하여 저자들의 전문성을 살린 온라인 강좌를 제작하여 독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진인재개발원은 IT 자격증 과정과 OA 과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재 개발에 필요한 경영, 리더십, 영업/마케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보험 환급 과정에 대한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며, 최상의 LMS를 도입, 구축하여 철저한 수강 도우미 시스템을 통해 수강인들에게 최고의 학습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진닷컴은 국내 IT 출판 1위라는 뜨거운 자부심으로 IT 출판 분야뿐만 아니라 e-러닝 사업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 어갈 것이며, 지난 20년간 선택적 집중화를 통한 도서 개발과 연계 사업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 대담 /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 기간: 1년(2008. 1. 1. ~ 2008. 12. 31.)

2. 보상 대상: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 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 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1만 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50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 편 이상 1편 이하	7,56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 편 이상 1/2 편 미만	3,770원	
		1/4 편 미만	2,270원	
음악 저작물		1/2 편 이상 1편 이하	4,87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 편 이상 1/2 편 미만	2,430원	
		1/4 편 미만	1,440원	
미술 사진 저작물		1/2 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430원	
		1/4 쪽 이상 1/2 쪽 미만 크기	3,700원	
		1/4 쪽 미만 크기	2,210원	

※ 최저 1만 부 이하는 1만 부로 하고, 1만 부 초과부터 발행 부수에 비례함.

※ 동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연구재단 소식

※ 이사회 개최

- ... 우리 연구재단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1시 2007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제1호: 2007년도 출연금 기본 재산 편입
 - 제2호: 200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 ... 우리 연구재단은 2008년 2월 19일 오전 11시 200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제1호: 2007년도 결산
 - 제2호: 2008년도 교과용 도서 발행사 출연금 배분 내역 보고

※ 2008년도 연구 사업 추진

- ... 우리 연구재단은 2008년도 정책 연구 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서 발행사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연구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책 연구 과제는 수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재단 조사연구부로 문의바랍니다.

※ 2008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 ... 우리 연구재단은 2008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를 발행사로부터 기증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서정보관은 현재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 29,949책, 외국의 교과용 도서 6,553책을 수집, 소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 기증에 협조하여 주신 (사)한국검정교과서, (주)두산, 대한교과서(주),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주)금성출판사, (주)교학사, 향우산업(주)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08년도 발행사 출연금 납입 안내

- ... 우리 연구재단은 2008년 2월 19일 이사회에서 2008년도 발행사별 출연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배분,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발행사에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출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검정교과서: 229,050천 원
- 대한교과서(주): 125,850천 원
- (주)교학사: 62,500천 원
- (주)천재교육: 43,850천 원
- (주)금성출판사: 23,450천 원
- (주)지학사: 15,300천 원

※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 ...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발행사 편집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과서 출판 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의 내용: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정책 특강,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 교과서 문장론, 교과서와 저작권법, 교과서 편집 디자인론
 - 운영 단위: 3일(19시간)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재단 홈페이지(www.ktrf.re.kr)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 ... 우리 연구재단은 초·중·고등 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과서의 기능 및 중요성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자 제6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를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재단 홈페이지(www.ktrf.re.kr)에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교 과 서 별 구 입 처

교과서			발행사	전화 번호
국정 교과서	초등학교	○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대한교과서	(02)3475-3800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 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즐거운 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 길잡이 3~6학년 포함)	지학사	(02)330-5302
		○ 과학(실험 관찰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예 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학사	(02)7075-120
	중학교	○ 국어 1, 2학년, 국사,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 국어 3학년(생활 국어 포함)	대한교과서	(02)3475-3800
		○ 생활 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학사	(02)330-5302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공업계, 수산계, 상업계 가사 실업계(이산 수학, 해양 과학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공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 일부	대한교과서	(02)3475-3800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농업계 일부	지학사	(02)330-5302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어1, 확률과 통계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과학계, 외국어계(아랍어2, 생활과 과학 포함)	금성출판사	(02)2077-8145
		○ 체육계, 농업계, 상업계 일부	교학사	(02)7075-120
검정 교과서		위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2657-3540~4

| 서 울 지 역 직 매 장

- (주)두산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모든 국 검정 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 02-323-4682~3)
- 지하철: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 여 분 야 _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 | |
|---------|---------------------------------|
|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포인트 3.5매) |
|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 · 원 고 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 · 기타 문의 | 전화 (02) 2651-1950 연구지 담당자 앞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ktrf.re.kr/ 이동

HOME CONTACT US SITEMA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재단소개 교과서연구 교과서정보관 출판교실 알림마당 참여마당

교과서정보관 이용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0 2 . 2 6 5 1 . 1 9 5 0

● 전철 _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_ 603, 5012, 6614, 6624, 6640번

| 운영 개요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 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8,637	6,553	35,190
일반 자료	2,682	-	2,682
계	31,319	6,553	37,872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2:00
공휴일	휴관